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결의문>

**참여와 연대 20년,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습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는 시민 스스로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자각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분단체제의 질곡,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시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치를 세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특권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소외와 배제를 강요하는 양극화 경쟁사회가 아닌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적대와 반목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넘실대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참여연대가 발휘한 독립적이고 왕성한 활동의 바탕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참여연대와 함께 나누고 실천해온 행동하는 시민과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쉽 없이 달려온 20년이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생활고를 비판하며 일가족이 생명을 내려놓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들은 제대로 규명조차 되지 않은 채 각종 수사방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안정적인 보육과 노후대비는 먼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혁을 포장한 '비정상의 정상화' 논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뒷걸음치기만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은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횡포는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과 혐오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북' 낙인찍기처럼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북한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역설이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통일대박'이 소리 높여 외쳐지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극적인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4년에 절망했던 현실은 2014년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2014. 3. 8.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시대, 온 사회가 경쟁에 짓눌려 있고 시민이 온전히 누려야 할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손쉽게 내던져지는 시대, 대립과 갈등이 평화를 잠식해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20년간 참여연대가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 입법과 사법의 현장에서 감시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참여연대 창립 당시 함께 만들고자 했던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스무살이 되는 참여연대는 제20차 정기총회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첫째, 2014년이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총체적 선거개입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헌정질서 문란의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위법, 편법행위를 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오는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적인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요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관권선거가 없도록 감시하고 지자체에서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종북몰이와 공안통치, 공권력 남용에 적극 대응하여 법과 제도가 정권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권리 옹호를 위해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제보자를 시민과 함께 지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온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하도록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육에서

노후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재정체계의 개혁을 촉구하는 데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체제에 놓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지역사회의 풀뿌리 생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전국을 돌며 지역 경제민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와 서민금융, 교육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영토 분쟁을 구실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도 우려 수준을 넘어섰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억지력을 강화해서 핵무기를 막겠다는 발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낡은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는 결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불안정한 정권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시민의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안을 공론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갈수록 심화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감시하고 협력과 공존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내외 평화단체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연대를 보다 젊고 역동적인 시민참여의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배움터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카데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는데 조직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회원과 비회원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20년을 성찰하고 쇄신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했던 ‘성찰과비전위원회’와 각종 소위에서 논의했던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향후 10년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담은 <성찰과비전보고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련하게 권력과 정책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현장성을 강화하며, 평화의 자락을 넓히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방식을 쇄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가깝고 열린 참여연대가 되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년 운동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는 출판기획도 진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9월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참여연대 공동체를 일구어온 회원과 임원, 상근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모두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년이 된 참여연대가 흔들림 없이 왕성한 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회원의 수를 더욱 늘리고 미래를 위한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여 뿌리부터 튼튼한 참여연대를 만드는 것 역시 20주년 참여연대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로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목 차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결의문 2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3년 사업보고

2013 사업 총평	10
10대 중점과제	12
특별보고 및 특별과제	30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34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민생희망 본부 시민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 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61
시민참여분야, 정책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연대활동	67
소송/감사청구 성과	73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안

활동 목표와 방향	76
20대 중점과제	78
①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②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③ 유권자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 등 폐지 ④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감사제 도입 ⑤ 방충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충 통제 저지 ⑥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 ⑦ 경제민주화 지역 공동 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⑧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내실화 ⑨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 11 복지국가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세대간 소통과 연대
- 1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 1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 1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5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 16 한미일 군사협력·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17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18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 19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 모임' 신설
- 20 참여연대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20주년 특별과제 101

- 1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 2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 3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 4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 5 공간 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107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민생희망
 본부 경제금융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
 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125

시민참여분야, 정책기획분야, 미디어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연대활동 129

2014년 일정표 130

살림살이 2013년 결산안 및 2014년 예산안

2013년 회계 감사 보고	134
2013년 결산안	136
2014년 예산안	140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개정안

정관개정안	146
참여연대 정관	147
기구표	155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임원선임안	158
2014 임원 명단	160

통계로 보는 참여연대 2013

회원 현황	164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166
시민교육	170
감시와 정책제안	172

부록 180

회원 설문조사 결과 / 참여연대 노래

2013 사업보고

사업 총평
10대 중점과제
특별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소송/감사청구 성과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3 사업 총평

• 중기(2013-14년) 활동 목표

- 권력감시 역할 확대를 통한 새 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력 형성
- 정책대안의 대중성과 현장기반 강화
- 진보적 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강화
- 시민참여 기반 확충과 주체 형성
- 참여연대 구조개혁과 장기비전 확보

• 2013년 표어 : 공감과 행동

• 2013년 5대 활동 방향에 따른 평가

1. 권력감시/정책의제의 대중성 강화

- 민생복지, 공안기구 개혁, 정치개혁 등 호소력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공권력 남용과 대자본 횡포에 대한 시민 다수의 자구행동을 조직하지는 취지였음.
- 지난해 국정원 및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촛불집회, ‘을 살리기 운동’ 등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호응했던 대표적 시민행동에서 참여연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 이동통신 원가공개 등 시민일상생활과 밀착된 의제개발에서도 진전이 있었음.
- 다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참여연대의 정책이나 권력감시 활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세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단 개발이 미진해, 활동의 가짓수나 양에 비해 집중력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

2. 활동의 현장성 강화

- 사회적 약자, 고통당하는 현장의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기구, 국회, 사법부 등 사회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와 협력을 보다 적극화하고 심화시키자는 취지였음.
- 을 살리기 운동 과정에서 불합리한 갑을관계의 제도와 관행에 의해 고통당하는 현장의 중소기업인들, 편의점/대리점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당사자들과의 새로운 연대 모델을 창출하였음.

- 진료의료원 폐지 반대운동,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 강정과 밀양 주민들과의 연대, 쌍용차 노조,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과의 연대 등 현장 주민, 노동자들과도 적극 연대했고,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캠페인,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위활동 현장모니터, 재판 참관 등을 통해 국회, 정부기관, 사법부 현장에 대한 밀착 감시와 정책적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음.

3. 시민참여구조와 주체의 확대

- 그동안 회원소통 체계를 정비해온 것에 기초하여 회원과 시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특히 여성, 청년 참여프로그램과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음.
- 참여연대 아카데미 5주년 행사와 청년연수학교와 인턴프로그램, 청년동아리 지원, 시민행동단 예비모임, 민주교육연구팀 등을 통한 실험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참여활성화를 20주년위원회의 핵심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연중 장기비전 논의를 진행.
- 다만, 대부분의 시도들이 논의와 제한된 실험에 머물렀음. 2014년에는 시민과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4. 진보비전과 주체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

- 최근 사회운동이 내용과 주체 양면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통적 사회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과 긴밀히 교류하고 새로운 의제와 혁신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미래 비전을 풍부하게 하자는 취지였음.
- 20주년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운동 내외부 자문을 진행하였고, 한국사회 미래 비전에 관한 출판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세를 따라가는 연대는 활발했던 반면, 새로운 의제 개발과 주체 형성을 위한 운동간 소통과 연구개발은 다소 미진. 하반기 조성된 공안정국도 자유로운 논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5. 참여연대 비전과 활동구조의 성찰과 혁신

- 20주년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비전과 방향을 점검하고 활동구조와 주체를 혁신하며, 그 실행계획과 자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음.
-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 분야 활동을 점검하였고, 특히 시민참여활성화, 구조개편, 상근역량 강화에 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집중점검. 2014년에는 혁신방안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

중점과제 1. 중소기업·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 중기(2013-2014년) 목표와 방향

-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 담합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 하도급 및 원하청 피해 근절, 청년일자리 대책 등 중소기업·서민·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와 공론화
-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입법로비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노동현안시국회의 등과의 공동 활동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당사자들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소기업·서민·청년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 운동

- '갑을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생존권(남양유업 사태, 편의점·가맹점 문제, 상가임차인 피해, 각종 대리점 이슈, 방송계 갑을문제, 문구점·고물상·대리기사·택배노동자 등)과 관련된 사례발표회 20여 차례 공동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사례는 문제를 해결함
- 중소기업, 갑을 문제의 피해자들의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모임'(상가세입자협회)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함.
-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편의점·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리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변종SSM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안 등을 국회에 직접 청원하거나 의원발의를 이끌어냄.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활동의 결과 합정동 홈플러스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파는 15개의 품목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시키는 성과를 거둠.
- 청년고용할당제도를 입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토익시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토익 관련 학원들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토익시험의 불공정과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함.

2. 재벌·대기업 체제 및 불공정·특혜 감시와 개혁

- 롯데그룹, CJ그룹, KT그룹, 보광그룹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사회적 교섭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3개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
-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함께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경제민주화 Watch' 시리즈를 연재하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경제민주화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함.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촉진

-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 '불공정상담센터', '풀뿌리경제특위' 운영 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함.
- 지방정부의 불공정 사건 상담조사, 조정 및 고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냄.

• 약평 및 보완 과제

- '갑을 문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정위 신고, 법률 개정까지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감시, 갑을 문제 해결과 민생 살리기, 중소기업인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갑을 문제나 중소기업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청년층 이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은 개선되어야 함. 또 경제민주화나 갑을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률들이 남아 있는 만큼 입법화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가 중소기업인, '을'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2. 지속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화와 당사자(세입자 등) 운동 강화
- 이동통신요금 인하, 통신공공성 복원 위한 소비자운동 강화와 통신대기업 횡포 근절
-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공공성 강화
- 이자폭리 근절 및 서민금융보호,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캠페인 지속
-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다방면 활동 기획·추진

• 주요활동 및 성과

1. 서민 주거권 보장과 주거비 낮추기

- 집값의 하향 안정,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중소형·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충 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등 다수 개최하고, '전국세입자협회' 결성을 지원함.
- 텃밭공동체 주민들, 신정동 세입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철거/파업현장에서 불법행위 일삼는 경비·용역을 규제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
- 서울시 뉴타운 문제 등 재개발·뉴타운 문제를 다루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운영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전개함. 다주택자, 투기세력, 건설자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활동을 지속함.

2. 국가장학금제도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캠페인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이행과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신설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침. 국가장학금 유형2를 통해 중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고등교육법 추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국가장학금액 인상, 성적기준의 부분적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등의 성과를 거둠.
- 대학생 기숙사·주거 문제, 일부 대학의 저소득층 장학금의 편법적 사용 문제, 대학 학교법인의 법정 전입금 문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등을 제기함.
- 연세대를 상대로 한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투자·손익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함.

3.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확보

- 엘티이(LTE)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 공정위 신고,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손해배상소송 1심 진행, 무선인터넷음성통화(mvoip) 차단 손해배상소송 1심 진행 등 법적 대응에 나섬. 방송통신위원회 앞 통신비 인하 캠페인이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함.
- KT피해자모임, LG유플러스 피해자모임과 함께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공정위에 신고함.
- 이석재 KT 전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1·2차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와 이석재 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냄.

4. 가계부채·이자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보호

- 이자폭리 문제 해결 노력의 결과로 이자제한법 최고 금리 25%로 인하시킴. 대부업 법상 최고 금리 34.9%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일부 강화하도록 함.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함.
- 정부의 서민금융 관련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을 지적,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함께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폭리 및 담합행위 대부업체들 공정위에 신고함.

• 약평 및 보완 과제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폭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에 대해 끈질기게 이슈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에 주력했음. 반값등록금, 공공임대주택, 의료복지, 통신비 인하, 고리대 폐해 근절 등을 공론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아직 문제를 전면 해결했다고 볼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전월세 문제, 통신비 부담, 서민금융·가계부채·고리대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중점과제 3.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국가 정책과제 제시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반영을 추진
- 보육, 방과후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구체적 과제 실현

• 주요활동 및 성과

1.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 축소 반대 기자회견/성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지급 방안 비판 등 공약후퇴 저지 활동을 전개함.
-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 권리가 있다> 제작,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홍보물 거리배포 캠페인, 전국순회 강연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사용설명서> 개최, 청년 연금문제 간담회, 기초연금 국민공청회,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동영상 제작 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함.
-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를 촉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성 보장 및 개선 활동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법적 권리를 행정부 재량으로 축소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및 국회 로비 활동을 전개하여 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둠.
-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을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함.

3.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운동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의 축소 비판 활동,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한 연대활동 및 시민행동 등에 참여함.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4.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지원 및 토론회를 개최함.
- 정부의 무상보육 재정난 방지 비판 기자회견 개최, 예산분석 보고서/논평 등을 발표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기초연금 공약후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후퇴, 진주의료원 폐원, 보육 재정난, 기초법 개악 시도 등 복지 관련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적인 활동력을 보여줌. 연금 관련 소책자와 홍보물 제작, 연금 전국순회 강연, 청년층과 연금·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소통 시도 등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전개했음. 또 복지예산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성과임.
- 다만,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획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고, 특히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독자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임.

중점과제 4.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노동탄압 근절, 노동권·노조활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론화와 집중 사업 전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

• 주요활동 및 성과

1. 노동권 침해와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H-20000 프로젝트, 농성,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참가 등 연대활동 다수 진행함.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집회에 대한 경찰 탄압에 대응, 집회금지통고취소소송 제기하고 승소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설립 취소 처분에 대한 항의활동(토론회, 1인 시위 등),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행태에 대한 1인 시위 진행, 철도노조 탄압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긴급청원 및 세계 노동연구자들 대상 청원운동, 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개설 및 운영 등 노동권 침해와 탄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 기초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및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2 : 기초자치단체> 발표
-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조사 보고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보고서 1 : 공공기관> 발표
- 생활임금 제도화와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3.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및 국회의원 발의 이끌어 냄.

• 약평 및 보완과제

- 정부 및 대기업의 노동권 침해와 탄압, 삼성전자서비스·이마트 등 현안이 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쳐 문제해결에 기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관한 연속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은 것이나 최저임금문제와 함께 ‘생활임금 제도’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었음.
- 그러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대응이나 비정규직 제도개선안 마련 등 연초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음. 노동권 침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등 대기업의 노동 탄압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임.

중점과제 5.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정치 바로 세우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제대로 일하는 국회’, ‘투명하고 열린 국회’, ‘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개혁 방향 제시
- 국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감시 및 공익로비

• 주요활동 및 성과

1.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진행

-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해 11개 시민단체와 의원 연구모임 ‘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시작함.
-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소위원회 공개, △청소년의 자유로운 국회도서관 이용, △청원제도 개선, △의원 윤리심사제도 개선 등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입법청원서 제출함.
- 시민들과 의원들이 함께 국회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시민행사(6, 7월), 국회개방을 중심으로 한 국회개혁 시민홍보용 소책자 <국회를 시민 품으로> 제작, 거리캠페인(11월), 시민서명, 기자회견 및 언론 기고 등 진행함.

2.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에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하고 인사청문회 대응함.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재가동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치관계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함.
-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투표독려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활동 전개함.

3. 투표권 보장 운동

- 2012년 대선때 운영된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의 후속사업으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출된 국회의원 발의안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입법을 촉구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의원윤리가 바로 선 국회’라는 3가지 주제에 우선 집중하여 정책과제 발표 및 관련 기자회견과 시민서명 캠페인, 입법청원 제출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음. 몇 차례 이벤트 행사에 이어 정책 자료와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론화 수준은 아직 미흡함. 또한, 주로 ‘열린 국회’에만 치중하다보니 국회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등은 다루지 못했음. ‘제대로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의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했음. 연대회의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6.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과제 실현
-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민주화 과제 공론화
-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모니터링

• 주요활동 및 성과

1. 검찰총장 · 법무부장관 인사 대응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사 시절의 수사 행적을 짚으며 부적절한 지명이라는 입장 발표하고 인사청문회 기간 중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명박 반대 활동을 진행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책임을 물어 황교안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자질에 있어 큰 흠결이 없어,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묻는 활동을 진행함.
-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층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나는 이런 검찰을 원한다’ 시민캠페인 진행, 3,082명의 시민이 참여한 ‘권력눈치보지 않는 검찰총장 추천’ 요청서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9명에게 전달함.

2. 검찰권 오·남용 검사 감시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시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 13건과 관련 검사 41명을 선정하여 승진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함.
- 이명박 정부 5년 종합 검찰 보고서 발간함.
- <그 사건 그 검사 DB> 사이트 운영 시작함.

3. 검찰 개혁 과제 공론화

-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논평, 칼럼, 국회 공청회 출석, 토론 개최, 상설특검법 제정안 발의

등 상설특검제 입법촉구 활동을 펼침.

• 약평 및 보완과제

- 상설특검 도입 논의는 여야가 2013년 상반기 내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상반기에 적극적인 입법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하반기에도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013년 중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징계 등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다분히 주장을 펼치는 데만 그친 아쉬움이 있음.
-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민주화 과제를 애초 공론화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음.
- 검찰의 주요 수사 처리 결과와 담당 검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 87건부터 공개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사건 등은 추후 보충하여 공개할 예정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더 모색해야 함.

중점과제 7.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견제 수단 확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권위적이며 부당한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미흡한 법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함
-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적 견제 수단이나 시민자구수단을 발굴하여 이를 실제로 활용한 공익소송 등 시민행동을 전개함

• 주요활동 및 성과

1. '더 많은 민주주의 모임'(가칭) 구성 및 논의

- 참여연대 안팎의 전문가들과 '더 많은 민주주의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 방안으로 제안된 검사장 직선제, 주민참여제도, 합의제민주주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주제로 내부토론을 진행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견제 수단 마련과 실행을 애초 목표로 삼았으나,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심화 방안'으로 주제가 확대되었음. 하지만 사업을 담당할 상근자들이 6월 이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중단되었음.

중점과제 8.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북핵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및 주변국간 대화 촉구
- ‘한반도 정전 60년 : 전쟁을 끝내자’(가칭) 국내외 캠페인 추진
- 한반도 동북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괄적 해법(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재개, NLL 충돌방지과 공동이용방안, 한반도 동북아 핵위협 해소방안,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 제시

• 주요활동 및 성과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대안 공론화

-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분석 및 대안마련 위한 긴급원탁토론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개최, 남북 직접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캠페인 공동주최,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태평양 텔레토비> 영상 제작
- <시민정치콘서트, 남북위기의 실체와 해법> 개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협력 재개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협력 재개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결성, ‘한반도 평화, 시민이 만들어 갑시다’ 기자회견 개최

2. ‘한반도 정전 60주년,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추진

- 프레시안 공동기획 <정전60년, 평화를 선택하자> 연속칼럼(18회) 발표, 특별칼럼 <정전협정 60주년과 우리의 과제> 발표
- 정전협정 60년맞이 평화기행 및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7월)
- 정전 60주년 7.27 시민평화마당 <평화바캉스> 및 시민문화제 <전쟁 대신 평화를, 평화에 기회를> 개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일환으로 <글로벌 시민평화선언> 발표, <내가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캠페인, <정전 60

주년 한반도 평화 안에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작

-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공동집필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토론회(7월)

3. 동북아 비핵지대화 및 핵군축을 위한 국내 국제 연대 활성화

-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준비위원회 회의 참가 및 한미일 시민사회 공동행사 개최(4월)
- 핵군축을 위한 의원네트워크(PNND) 토론회 <핵없는 세상과 한반도 핵문제> (6월)
- <글로벌 시민평화포럼> ‘동북아 평화 및 안보 체제를 모색하며: 동북아의 새로운 출구모색’ 개최(6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캠페인을 시의적절하게 진행했고, 남북 긴장완화 및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시민평화행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은 7.27 평화 바캉스, 시민문화제, 한국전쟁 종식촉구 평화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로 진행되어 각계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냄.
- 정전 60년을 맞아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협정 체결 공론화 활동에 주력하려 했으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난항을 겪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슈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음.

중점과제 9.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가입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신입회원 확대
- 회원 맞춤형 의사소통 및 참여프로그램 정례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탈퇴율 낮추기

• 주요활동 및 성과

- 신규회원, 1년 회원, 10년지기 회원, 미납회원, 탈퇴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만족도를 높임.
- 매월 신입회원, 회비증액 회원, 10년지기 회원, 지인 추천 회원의 명단과 인터뷰를 참여사회와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제고하려고 노력함.
- 19주년 창립행사에 맞춘 ‘튼튼재정캠페인(회비증액, 회비한번더, 생일축하금)’ 진행하였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음.
- <내 친구가 회원이 되었어요> 캠페인을 통해 회원가입 권유를 유도함.
- 회원가입 가능성이 높은 시민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 교환광고 4회, 뉴스레터 발송, 대안언론 광고, 대안강좌를 찾아 회원가입을 홍보함. 3.8여성대회, 탈핵대회,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집회 등 다수의 행사에서 회원가입 부스를 운영함.
- 일정기간 후원이 중단된 회원에게 재후원 요청 편지를 발송하고, 후원중단 의향을 밝힌 회원에게는 상근자가 다시 전화 연락하여 회원유지 및 후원지속을 요청함. 2012년에 비해 탈퇴회원 수가 455명에서 296명으로 159명 줄었음.
- 모바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2013년 회원가입 886명, 탈퇴 296명으로 2012년 대비 회원 순 590명이 증가하여 현재(2013년 말 기준) 회원은 13,697명.
- 회원가입 이유 중 ‘권유’가 가장 많아 관련 캠페인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었음. 실효성을 높일 방법 및 전략이 더 필요해 보임.
- 대안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홍보를 시도하였고, 회원가입 증가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 거둠. 다만, 참여연대 주요 이슈와 연계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부족하였음.

중점과제 10.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함
- 자원활동 외에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기획하고 지원함
- 청년/대학생 대상 사업을 개선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구함
- 서로 배우며 삶과 꿈을 일치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시민행동기획단

- 시민행동기획단 구성 방안, 운영 방안을 모색함.
- 시민행동기획단 구성원을 모집하여 워크숍을 5차례 진행함. 행동주제를 ‘탈핵’으로 정한 이후 탈핵 강연 주최, 밀양희망버스 캠페인에 참여함.

2. 청년사업

- 2030번개모임 등을 열어 청년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대학생모임 구성 논의를 진행함.
- ‘청년행동단(가칭)’ 준비모임을 진행한 이후 15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연대’ 모임이 만들어졌고, 2014년 2월 현재 모임이 지속되고 있음.
- 시민운동에 대한 교육과 직접행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년연수’ 프로그램과 ‘인턴’ 프로그램을 과거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했음.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연대를 통해 민주주의, 시민운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청년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티셔츠 판매, ‘힘내라 청년’ 기금 모금을 진행하였음.

3. 민주주의 학교

- 아카데미느티나무 주관 기획강좌, 인문고전 강좌, 참여형 워크숍, 사업부서 주관 강좌 등을 진행함.
- ‘민주주의 학교’ 대표 강좌로 <나>의 시민정치학교 I, II를 기획, 진행하였음. 수업 시간마다 20분씩 참여형 프로그램을 배치해 강사와 참여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음.

-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워크숍>,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 근대편>은 참여자와 강사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사회복지위원회가 기획, 주관한 <복지국가와 나>는 주제가 시의적절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도 높았음.
- ‘민주주의학교’ 체계화와 대표강좌 개발을 위한 연구팀 구성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시민행동기획단을 실험해 보았으나 방향과 운영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함. 하지만 자원활동 이외에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필요함.
- 현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연대’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청년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했음.
- <나>의 시민정치학교II>는 ‘생활정치’라는 기획의 방향은 좋았으나 참여자에 대한 예측과 홍보 부족으로 참여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미진했던 <민주주의 학교> 체계화와 대표강좌 개발의 과제는 <민주주의 학교 연구팀>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임.

특별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 · 책임추궁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시민사회 결집과 공동대응

- 국정원시국회의 결성 공동제안 및 운영, ‘촛불집회’ 지속적인 개최
-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인사 공동기자회견 4차례 진행

2. 특검실시 촉구 캠페인

- 국정원시국회의 등에 특검청원운동 제안, <국정원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촉구 국민서명운동> 캠페인 진행 및 특별검사 임명 청원 국회 제출
- 특검촉구 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출근길 1개월 행진, 참여연대 임원 1개월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 특검청원운동 홍보 위한 한겨레신문 전단지 배포 활동 전개

3. 시민행동

-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 시민사회단체 공동행진 제안 및 성공적 진행
- <국정원이 빼앗아간 헌법 제1조를 찾습니다> 제헌절 전국 동시 1인 시위 및 인증샷 시민행동 등 전개

4. 형사고발

-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모집 후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 관련 원세훈 전 원장 등 추가 고발,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한 서울경찰청 간부 등 15명 고발

5.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

-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및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3월)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모니터, 의원 면담, 의견서 제출 등

6. 기타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

- 8차례의 거리 또는 대학강연회, 국정원 사건 정보모음 종합웹페이지 운영, 국정원

사건 알리기 위한 거리전시회 등 진행

- 국회 국정조사 회의 방청 및 주요 발언 실시간 트위터 중계

• 약명 및 보완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그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집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특검 통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 매주 주말 집회를 개최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전개했음.
-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진상규명 축소은폐 관련자 고발, 표창원 교수 등이 참여한 순회강연, 거리행진, 온라인과 거리시위 등 회원·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동수단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함. 국정원시국회의 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공동사업들(특검청원운동, 공동기자회견과 공동행진 등)을 제안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이 한국 사회 논란의 대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데 기여하였고, 미흡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한 일부 진상규명과 야권의 특검법안 공동발의, 국정원 개혁특위 등을 이끌어냈음.
-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대응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관심 제고 및 사건해결의 계기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특별과제.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사업

• 사업 목표

- 참여연대 20년 운동 역사 정리 및 평가
- 향후 10년 발전 전망과 혁신 방안 마련
- 지난 20년간 참여연대와 함께 한 사람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 공간 개방과 이미지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주요활동 및 성과

1. 20주년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주년 비전과 과제,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단위로서 전현직 임원과 회원, 상근자들로 구성된 '성찰과비전위원회'가 4월에 출범함. 산하에 평가비전위원회, 출판편집위원회, 공간개선키획단, 행사기획단을 구성함.
- 4번의 정기회의와 20주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향후 분야별 비전과 과제 논의일정, 발전모금 기획방향, 회원확대 및 시민참여 강화방안, 공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점검함.
- 참여연대 인지도와 활동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과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2. 분야별 활동평가와 비전 수립을 위한 평가비전위원회 운영

- 평가비전위원회 7번 정기회의를 진행하여 분야별 활동 평가 토론을 진행함.
- 평가비전위원회 산하에 '조직발전과운동혁신소위', '상근역량강화소위', '시민참여사업개발소위' 등을 구성하여 각 소위별로 논의결과와 향후 과제를 구체화하여 보고함.

3. 출판편집위원회 운영

- 출판편집위원회 기획단 회의를 통해 20주년 기념 출판기획을 수립하고 점검함.
- 참여연대 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20주년 백서 발간을 기획하고 집필에 들어감.
-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운동사에서 참여연대가 차지하는 의미와 운동방법론 등을 평가분석하는 단행본 발간을 기획하고 집필에 들어감.
-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가치를 제안하는 <한국사회비전보고서>(가칭) 발간

을 기획하고, 집필에 들어감.

- 참여연대 20년 활동 중 주목해야 할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증언과 기록을 담은 <참여연대 20년 20장면>(차병직 변호사) 발간 준비에 들어감.

4. 공간개선기획단 운영

-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 3월까지 마스터플랜 확정 후 2014년 6월 중 공사진행 및 완료할 예정

5. 행사기획단 운영

- 2014년 창립기념식과 학술행사, 홈커밍데이, 시민 행사 등에 대한 행사기획과 홍보 기획 논의 시작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2013년 계획했던 20주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차질없이 진행되었음. 20주년 <성찰과 비전 보고서>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회원과 외부인사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임.
- 발전모금 기획과 공간개선 논의가 다소 지체된 바, 1/4분기 내에 확정해야 함. 20주년 창립기념식, 단행본 발간, 행사기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함.
- 이에 2014년에는 20주년 사업을 5대 특별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회 평가 체계 정형화
- 국회의원 DB사이트의 전문화·대중화
- 의정감시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정치 바로 세우기> 실행

2.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국회 모니터 및 평가

- 4월,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발간하여,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또는 출석 후 자리를 비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국회 실태를 드러냄.
- 투표권 보장 관련 법안(△투표시간 연장,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입법을 촉구함.
- 통합진보당 의원 2명에 대한 의원자격 심사안 발의를 계기로 의원자격심사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긴급 좌담회 개최함.

3.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편 진행

- 장시간 작업이 필요한 DB입력 방식을 간편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함. 이를 통해 DB업데이트 속도를 높이고 사이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
- 개편된 사이트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메뉴 확정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여해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임을 강조하고자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 현황을 의정활동 평가의 방식으로 시도해본 것은 긍정적이었음. 다만, 첫 보고서 발표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으며, 평가에 유의할 점이 새로 발견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확인되었음.

- 주요 법안 제출 의원 현황, 주요 법안에 대한 의원별 입장, 의원별 표결 성향 등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계속 개발하고 실행해 볼 필요가 있음.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실행
-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비평 활성화 및 자료축적
- 로스쿨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한계 진단과 발전의 계기마련
- 모니터링 보고서 안정적 발간
- 새 정부의 사법개혁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주요활동 및 성과

1. 헌법재판소장 교체기 대응 활동 전개

-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좌담회 개최하고,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판례 분석 보고서 발표함. 이동흡 후보자 사퇴 후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재판관 시절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힘.

2. 로스쿨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진단

- 로스쿨 도입 5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 발표하고, 로스쿨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에 대한 좌담회 개최함.

3.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평 활성화 및 자료축적

- 판결비평 좌담회 3회 진행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평한다는 취지에 맞게 인터넷 영상 중계와 SNS 중계, SNS를 통한 시민 의견 모으기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함. 2013년 하반기부터는 판결비평진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판결비평 칼럼이 집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해 2차례 판례 분석자료를 내고, 이에 기반하여 임명 반대활동을 전개한 것은 모니터 전문 단체의 특징을 잘 살린 대응이었음.

- 상반기에는 현안 대응과 연간 일정에 따른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으나, 하반기부터 활동력이 저하되면서 모니터링 사업 등 일상 사업이 불안했음. 모니터링 보고서의 안정적인 발간을 위해 연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법감시센터가 도입을 주창했던 로스쿨 제도를 점검하는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조사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법원(헌재) 판결 자료 축적 활동은 진척되지 못했음. 우선 판결비평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 견제 수단 확대
- 부패방지 및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권한남용 감시와 개혁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행사 시민 견제 수단 확대> 실행

2.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강화 제도 개선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에 이어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KDI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 이해충돌 해소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3> 발표함.

3.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명박 대통령 지령기록물 중 후임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 없이 봉인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설명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관한 질의서 발송

4. 부패사건 모니터 및 이명박 정부 문제사건 해결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 사건’ 8가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 제출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5. 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와 개혁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정책자료집 발표(3월)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모니터, 의원 면담, 의견서(논평 포함) 제출 등

• 약평 및 보완과제

-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강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업무상 횡령’이 불거진 후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이끌어냈고,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후보자 사퇴로 이어짐.
- 부패사건 모니터 및 이명박 정부 문제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형사고발하는 등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 반면, 애초 기획하려 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음. 다만 연례보고서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는 발표하였음. 이해충돌 해소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지만, 이후 입법로비 활동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문제제기에 그치고 말았음.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익제보자 치유 프로그램 등 공익제보자 지원 확충

• 주요활동 및 성과

1.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

-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평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신분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에 신청하고, 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끌어냄(10월)
- 포스코그룹 부정행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스코의 탄압 폭로 기자회견 및 해고조치 취소요구서 발송
- 윤상경 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의 명예훼손 사건 지원(무혐의 결정), ‘지라니합창단’ 직원들의 서울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지원(화해 결정) 등 법률지원 활동 전개
- 지원 내용의 축적으로 연말 치밀한 의인상 심사 가능
- 공익제보자들에게 치유를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소개

2. 공익제보 법 제도 개정 추진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공동 청원, 서울시 의회 통과됨.
-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개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 청원안 국회 제출함.

3.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

-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12월)
- 의인상 수상자로 7명을 선정하고 의인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신분보호조치 신청 후 보호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결실도 거두었음. 다만 축적된 사례를 콘텐츠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 공익제보자 치유 프로그램은 미미하게 진행되는데 그쳤음.
- 제도개선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에 성공했음.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추진해야 할 것임.

공익법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에 대해 기획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제도 개선 노력 계속
- 로스쿨졸업 변호사 연수의 체계화, 지속화 등 공익변호사 양성사업
-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납세자소송 도입 등 공익법제 운동 재점화
- 사회권 등 새로운 분야의 공익법운동 연구 및 시도

• 주요활동 및 성과

1.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제기 및 입법청원 진행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현황 비공개 취소소송제기
- 정부기관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기관(공직자)이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를 분석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 발표 및 고소 및 소송제기 중단 촉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민방송 R-TV 방영 <백년전쟁>에 대한 중징계 결정 취소소송 제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중 모니터링

-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방심위 심의 현장 방청 및 비판논평 발표
- 부당한 통신심의 사례 10개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통신심의 행사 개최
- 통신심의규정 개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개악저지 피켓팅 등 진행

3.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활동

- 대한변협, 국회의원(전해철, 송호창), 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녹색환경법률센터, 참여연대) 공동 주최 토론회 개최 및 집단소송법안 마련

4. 공익변호사 양성과 공익소송 지원

- 공익변호사와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새순기금' 후원자 감사 및 기금사용안내 서한 발송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회 실시(1월, 8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통신자료제공 정보 비공개 소송, 국민입막음 소송 실태 보고서 발간, 진실적시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한 기획소송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은 계획한대로 진행함. 정의를 위한 소송학교, 통신심의 모니터단 운영, 집단소송제 도입 운동 등은 계획했던 만큼 진행하지는 못함.
- 상근변호사를 영입하여 소송대응, 입법건의 제시 등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경제민주화 실현'과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살리기' 활동
- 교육, 주거, 통신, 가계부채(이자) 문제 외에 새로운 소비자·서민 이슈 발굴 및 대응
- 새 정부의 공약이행 감시 및 주요 민생정책 현실화 촉구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중소상공인·청년·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실행

2. 주거, 부동산 문제 대응 강화와 세입자 운동, 서민주거권 캠페인 전개

-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토지구획공동성네트워크, 재개발개혁포럼, 텃밭공동체대책 모임 등 연대 활동 주도
- 전국세입자협회(준)의 결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전월세상한제 촉구 운동 전개

3.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운동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대응 및 상품공급점이나 변종SSM 등의 신종 골목상권 침탈 문제 적극 대응,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 '을'살리기비대위와 연대 활동 강화
-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문구점, 고물상, 대리기사, 택배노동자 등 전국의 각계 '을' 당사자들과 함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대활동 진행

4.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및 소비자 이슈 대응

- 정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에 맞서 철도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등 시민사회 연대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운동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을 결성, 대부업 광고 규제 및 대부업 폭리 문제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5. 민생 당사자 조직 지원 및 연대 활동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망원시장상인회, 전국세입자협회, 상가세입자협회,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등 각 편의점주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등 각 대리점주협의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전국고물상연대,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우체국택배조합비대위,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의 활동 지원 및 연대활동 전개

시민경제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재벌관련 부문 활동 전개
- 금융기관 횡포 근절 등 서민금융 이수 대응과 금산분리, 금융기관 공공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확대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실행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위해 토론회,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
- 재벌개혁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현안이 되는 이슈에 대한 논평 및 보도자료 대응을 위주로 전개함
- 상법 개정안과 관련 사외이사 선임 법제화에 대한 의견서,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이사 면책조항 도입 반대 의견서,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대통령 공약의 후퇴에 대한 비판 등 활동 전개

3. 금융정책 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운동 전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안전판매 금감원 신고,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이슈리포트 발표, 동양사태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 금융권력 감시의 일환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행법 위반 검찰 고발,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운용과 관련한 권력기관의 봐주기 의혹 감사청구함.

4. 론스타 대응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발표
-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민생희망본부의 갑을 문제 개혁운동에 협력하여 공정위 신고와 분야별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를 진행함.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은 개혁방안 제시와 공론화 성과 있었으나 제도개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 재벌개혁 활동은 대응능력 및 정책전문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전문성 갖춘 단체의 활동과 차별화되는 대응 전략 고민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함.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평가 및 대선공약 이행 감시
- 국회, 보건복지부 등의 복지정책 모니터링 강화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보편적 복지 확대 개혁입법 운동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사업 진행

2.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후퇴, 보편적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 후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공론화함.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복지예산 문제점을 공론화함.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촉구

- 잇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평 발표. 전달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에 참관했으나 개선방안 제시에는 이르지 못함.

4. 월간 <복지동향>의 안정적 발행 및 출판사업 강화

- 정기간행물인 월간 복지동향 매달 발간
- 복지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기획,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새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점을 공론화되는 데 기여함. 월간 복지동향 발간, 복지강좌 개설 등 복지이슈 대중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대응해야 할 복지 분야 현안이 많아짐에 따라 인력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기획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고용노동부 등 노동행정기관 모니터링 강화
-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생활임금 제도화 및 확산
- 새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실행

2. 생활임금제도 확산 및 최저임금 개선

- 성북구, 노원구의 생활임금 도입의 후속사업으로 생활임금 제도화 및 확산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데 노력함.
- 최저임금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응활동을 진행함.

3. 산업재해 등 노동현안 관련 공동대응

- 각종 대형 산업재해 사건에 공동대응하고 산재노동자 추모제를 공동 진행함.

4. 새 정부의 노동정책 모니터링

-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감시 활동과 실태보고서 발표

• 약평 및 보완과제

- 산재사고,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국회 청소노동자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정책 모니터링에 집중함. 생활임금 확산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임금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음.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새 정부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정책 제언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복지국가 재원 마련을 위한 담론 생산, 세제개편 방향 제시
- 예산분야에 대한 시민운동 역량 제고 및 납세자 권리 강화 운동
- 시민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세청 개혁 운동

• 주요활동 및 성과

1. 새 정부 조세재정 개혁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활동

- 복지재원 마련 위한 세제개혁 제언하고 이행 과정 모니터링함. 19대 국회의 세법관련 발의 현황 정리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체계 담론 형성과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운영

2. 공평과세와 부자중세 실현 캠페인

- 과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재벌 부동산 소유현황 추이 자료 발간, 부동산 과세 관련(취득세 영구감면) 입장 발표
-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차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보는 불평등 샷' 발표
-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슈리포트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발표

3. 예산안 대응 및 예산낭비 감시 기획 사업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입장, 상반기 추경예산안 관련 입장 등을 발표함.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을 구성, 분야별 정부예산안 대한 분석 결과와 입장을 발표함.(만민공동회 개최) 문제성 예산으로 지적한 약 1조원 규모의 54개의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 193.7억 원이 삭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둠.
- 국민소송법(구, 납세자 소송법)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 공청회 진행함.

- 영어능력평가 시험에서 국가 예산 낭비 사례 발표

4. EU프로젝트를 통한 조세정의 분야 국제연대 활동

- 유럽 지역에서 조세정의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유로다드와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 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함.

5. 역외탈세 방지 활동

- 역외탈세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관련 입장 발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2회 개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례법 발의 등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제도 구축을 모색하고자 발족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이 조세재정 분야 담론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캠페인이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 다만 연말에 세제개편에 관한 참여연대의 종합적인 입장을 담은 이슈리포트 발표로 향후 대응 기초는 확보함.
- 과세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 격차를 주제로 한 ‘한눈에 보는 불평등 3’ 인포그래픽 자료를 발표하여, 누리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음. 시민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자료를 계속 시도해야 할 것임.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정전 60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실행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지속
- 정치편향 집체안보교육 모니터링 등 안보기구/정책 민주화 운동 기획
- 평화군축센터 10주년 맞이 평화운동의 향후 10년 전략과 과제 탐구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실행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지속

- 제주해군기지 사업 줄속 시뮬레이션 규탄, 국회가 제시한 ‘70일 검증기간’에 강행된 불법공사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및 직접행동 진행
- 강정집중방문의 날 6회, 전국대책회의와 함께하는 <비념> 상영회, <러브 오키나와> 서울 상영회, 2013 강정 생명평화대행진 진행
- 해외활동가 입국거부, 천막 강제철거 등 인권침해 중단 촉구 활동, 구속된 ‘강정 평화지킴이’ 석방 기원과 모금위원회 발족을 위한 콘서트 개최
- 유네스코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평가와 여성포럼, 민중포럼,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총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가 열릴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 진행

3. 한반도/동북아 비핵군축 기획사업

- 국민연금의 확산탄 제조기업 투자 철회 캠페인, 최루탄 수출금지 촉구 기자회견
-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 몸쓸 나쁜 비싼 무기전(展)>,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 비판 직접행동, 언론기획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시리즈 6회, 토크쇼 <무기도입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진행

4. 국방·외교·통일관련 정책 모니터링

-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개혁과제 발표(9월), 2014년 국방예산, 군복무 기간 단축, 미사일방어체계(MD), 한미 고위급 회담 등 현안 대응하고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문제제기함.
- 남북대화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상봉 성사 등을 촉구하고,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 UAE 파병연장안 반대 의견서, 해외파병 규제완화 시도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서 제출

5. 안보기구/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기획사업

- 한일군사협정 관련 정보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진행,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발행(12월)
- 천안함 침몰 사건 3주기 대응 토크쇼 <천안함 미스터리 : 서재정과 이승헌이 묻고 답하다> 진행
- 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관련 한국 부담 대폭 축소 및 투명성 확보 제도개선 촉구 하는 기자회견 개최 및 공동 성명 발표

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 반핵발전소 연대활동

-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탈핵축제, 집회 및 공동선언 등에 참여하고, 일본 로카쇼 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 요청 공개서한 발송
- 밀양·청도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국민 호소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국선언 발표, 탈핵희망문화제, 탈핵희망버스 등 참여
- 신고리 1, 2호기 등 재가동 결정 규탄, 원전중설 2차에너지기본계획 추진 규탄 등 공동 대응

7. 기타

- 평화군축센터 10주년 기념 워크숍 및 기념행사, 10주년 좌담회 등 개최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마련 세미나 진행
- 시리아 난민 모금 진행 및 보고회 개최(1~3월), 시리아 무기·군사지원 반대 직접행동(3월),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 철회 촉구 국제공동 캠페인(9월) 진행

-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 반대 연대행동(4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지하는 동아시아 선언> 발표(8월)
- 2013 평화활동가대회 "유쾌하게 생각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라" 개최(11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나갔음. 추후에도 공사강행의 문제점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필요 있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군축박람회, 평화활동가대회,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글로벌 시민평화포럼 등 다양한 비핵군축 캠페인을 기획하고 공동 진행하면서 국내외 평화군축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함.
- 국방외교통일 정책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 파병 연장 등 현안에 대응하였으나 일부 정책적 대응에는 미흡했음.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함.
- 대체로 기획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시민의 참여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시도한 시민참여형 캠페인과 대중사업들에 대한 호응도는 확인되나, 일회성 사업을 넘어 답론 지형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새 정부 개발협력 정책 모니터링
- 대외개발원조(ODA) 감시운동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제도화
-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새로운 모델 시도
- 참여연대 캠페인 영문자료 배포, 국제사회의 흐름과 운동 사례 모니터링 정례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대외개발원조(ODA) 감시

-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ODA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입법청원
-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촉구 캠페인 진행. 약 9천 개의 서명을 국무총리실에 전달, 원조투명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뉴스레터 5회 발행함.

2. 아시아 연대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 주최로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시민사회의 의정참여 확대> 개최
- 태국의 왕실모독죄, 라오스 환경활동가 실종,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 석방 촉구 등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해 성명발표 등 연대 활동 지속
- 아시아 개발연대, 스리랑카 내전 등 <아시아 칼럼> 연간 16편 발행

3. 유엔 애드보커시

- 이슈리포트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및 UPR 권고사항 이행 촉구 논평 발행 (12월)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에 맞춘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

회> 개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및 강정, 울산, 밀양 등 현장 방문 조직,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전달

4. 국내 인권, 민주주의 문제 국제사회 알리기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인권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등 국제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밀양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이끌어냄.
-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와 인권단체의 성명을 이끌어냄.
- 민중포럼, 세계교회협의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아태지역 해양의 군사화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 진행
-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당시 발생한 인권침해 유엔 긴급청원 제출

• 약평 및 보완과제

- 정부의 ODA 정보 비공개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언하는 활동에 집중함. 원조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해 향후 대중 캠페인보다는 입법운동, 정책보고서 등의 방식으로 정책제언 추진하고자 함.
- 광주아시아포럼을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또한 주로 아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기고한 아시아 칼럼을 정례적으로 발행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 아시아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제고에 기여함.
-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주도성을 발휘했음. 유엔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향후 국제연대 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향후 국제인권기준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 향후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및 흐름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함.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시민교육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참여연대 시민교육 개발
-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 관계)에 대한 연구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중 '민주주의 학교' 부분 실행

2. 시즌별 강좌 기획 및 운영

- 4개 시즌별 강좌(총 51개)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3. 새로운 교육 실험

- 참여자들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음. 특히 <평화교육 워크숍 : 누구 나 맘대로 툭툭>, <민주적 진행자워크숍> <1518청소년 워크숍 - 나를 만지다 시즌 1,2>, <답사특강 : 강화도, 한국 근대의 시작> 강좌는 강사와 참여자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4.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평가와 연구

- 아카데미느티나무 5주년을 맞아 각 부문별로 '기념사업'과 '평가와 비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했음(민주주의 학교 바구니토크, 토크파티 및 집담회, 시민예술교육평가 대화마당 등).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강사, 실무팀이 아카데미의 5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높임.

5.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상반기에 강사, 참여자, 간사들이 참여한 <느티나무 페다고지 워크숍>을 두 차례 진행하여 아카데미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천과제를 세움.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툭툭!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정규강좌로 개설하고 참여했음.

• 약평 및 보완 과제

- 아카데미 5년차를 맞아 강좌 진행 및 모집이 안정화되었음. 특히 참여를 촉진하는 진행방법이 참여자들에게 정착되고 있음.
- 교육을 통한 관계형성으로 <그림자>, <근현대사 답사>, <우쿨렐레>, <꿈 투사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과 후속모임이 생겼음.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은 아카데미의 '배움의 커뮤니티', '시민들의 놀이터' 문화와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이들 소모임을 더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 주요활동 및 성과

1. 연구·학술

-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정치적 조건과 주체역량> 연구 1차 결과물을 '2013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의 특별세션 개최를 통해 발표하고, 최종 결과물을 담은 단행본 발간을 추진함. 평화복지국가 특별세션과 연동해 <유럽 시민주의의 이노베이션 : 굿소사이터티 담론>을 개최함.
- <민주주의와 독재> 연구는 상반기까지 내부 세미나 형태로 매월 개최하고, 이후 새로운 담론 연구로 주제를 확대해 진행함.
- 참여사회포럼 <창조경제를 묻는다>, <공유 경제와 동료 생산>,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초청 대화>를 개최함.

2. 출판

- 2030세대의 현실과 세대 간 이해를 주제로 한 도서 <2030크로스 - 불임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불임의 세대론>, 스웨덴의 복지제도와 이념을 분석한 도서 <스웨덴 스타일>, 평화국가와 복지국가의 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도서 <평화복지국가>를 발간함.
- <스웨덴 스타일>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됐고, 2012년 발간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대한민국학술원 '2013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 '민주화 이후의 법조지배체제'를 특집으로 한 <시민과 세계> 23호, '박근혜 정부를 묻는다'를 특집으로 한 <시민과 세계> 24호를 발간함.

3. 시민정치시평

- 매주 2편씩 <시민정치시평> 발행, 2014년 2월 현재 누적 발행 횟수 233회임.

4. 조직정비

- 운영위·편집위원회 합동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위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신임 편집위원의 영입 및 연구 세미나 활성화로 위원회의 역량과 위원들의 역할을 높임.

• 약평 및 보완과제

- 2011년부터 '복지국가'의 한국적 착근을 집중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키고 있음. 특히 한국적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복지국가'라는 담론 및 브랜드를 창안해 참여사회연구소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단행본 발간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
- 내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민주주의와 독재'는 연구진을 두텁게 구성하지 못해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으나, 연구소 내부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참여사회포럼은 새로운 담론이나 시의성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했으나, 각 포럼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도에 큰 편차가 있었음. 추후 주제 선정 시 시민들의 관심도를 주요하게 고려할 것임.
- 2013년에 연구소 단행본들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우수 도서로 선정되는 등 학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과 참여사회연구소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시민정치시평> 발행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으나 시민정치시평의 본래 목적이었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실시간 담론 생산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외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각기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화됨. 시민정치시평의 발행 목적과 실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임.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회원 15,000명 만들기과 탈퇴율 낮추기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사 진행 및 정례화
-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발전 및 청년층 대상 사업 모델마련
- 회원 소통 및 정보 관리 프로그램 개선 지속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회원 15,000명 만들기> 실행

2 중점과제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 실행

3. 회원 및 시민과의 접촉면 넓히기

- 회원 봄나들이 <열려라 국회, 국회에서 놀자>, 가을여행 <안동역사문화기행>을 회원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진행함.
-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영화상영 8회, 역사탐방 4회, 저자와의 만남 1회 등을 문화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함.
- 회원모임 청년마을(영화상영 8회), 마라톤모임(마라톤 행사 2회), 산사랑(산행 3회), 패누카, 참종다(정기공연) 등과 함께 행사를 열거나, 회원모임 주최 행사에 상근자들이 적극 참여함. 회원모임이 참여연대 시민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근자들이 회원모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모임과 참여연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시니어공부모임(준)과 아카데미 드로잉 강좌 후속모임 그림자(준) 모임에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회원 활동과 신규 회원모임 구성을 지원함.
- 자원활동가 감사프로그램으로 저녁식사모임, 영화와 연극 함께 보기, 복춘답사 등을 진행함.

4. 참여연대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관련

- 청소년, 대학생, 일반, 외국인 등 참여연대 탐방객맞이 53회 진행

- 청소년의 방문·체험 프로그램으로 “법안 오디션”, “정책 만들기”등을 진행,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5. 지역회원과의 교류 확대

- 정기총회 직후 4개 지역(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
- 경기북부모임, 광주전남모임 등 지역별 회원모임활동 홍보를 지원함.

6. 회원·회비관리 및 감사프로그램

- 신입회원, 가입 1년 회원, 10년 회원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 재정비
- 회비미납, 회비납부보류 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재개 안내 시스템 강화

• 약평 및 보완과제

- 격월로 진행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통해 신규 회원이 멤버십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후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점은 보완해야 함.
- 카페통인이 대관, 전시, 영화상영, 저자와의 만남, 강좌 등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함.
- 참여연대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연대 소개 및 옥상투어에 그치고 있음. 공간개선 이후 참여연대 역사와 활동을 보여주는 공간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함.
- 연 4차례 모집하는 정기 자원활동가의 배치와 관리, 감사프로그램 등은 체계화되었으나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치지역연대 소속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특강 또는 시민참여행사를 기획하여 서울 이외 지역의 회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정책홍보분야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콘텐츠 형식 혁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 2기 회원모니터단 운영, 활동통계 정례화 등 평가관리 지원 안정화
- 창립 시기부터 축적해온 여러 유형의 자료정리 및 관리 체계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콘텐츠 제작방식의 개선 시도

- 정보와 자료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을 통해 콘텐츠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단발적인 사업 지원 수준에 머물렀고 전반적인 혁신은 이루지 못함.
- 팩트 시트를 포함한 새로운 문서양식을 도입하거나 개선조치 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

- 2014. 1.25 현재 트위터 팔로워 26,056명, 페이스북 7,034명으로 관계망이 계속 넓어지고 있음.
- 집회, 기자회견 등 현장소식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반면, 아카데미, 문화행사 등에 대한 반응도는 낮음. 희망버스, 진주의료원사태, 국정원 대선개입, 갑을문제 등에 대한 리트윗과 '공유하기' 횟수가 많았음.
-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위키피디아, 포털 사이트별 백과사전에 수록된 정보를 수정함.

3. 오프라인 홍보물 갱신

- 참여연대 소개 자료(리플렛), 신입회원 소개자료, 연간 활동보고서, 영문 홍보물 등 기본 홍보물의 내용을 갱신해 새로 제작함. 활동기구 소개자료 갱신은 일부 완료함.

4. 2기 회원모니터단 운영 및 활동평가 정례화

-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3차례 진행함(조사 주제 : 참여연대 2012년 활동 평가 및

2013년 활동 방향(2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및 참여연대 웹사이트 평가(6월), 참여연대 20주년 회원의견(11월))

- 1기 회원모니터단 감사 편지 및 선물 발송(3회 이상 응답자), 총회에 참석한 회원모니터단(성실 응답자 중심) 회원에게 선물 증정

5. 자료정리 및 관리 체계화

- 영구보관용 인쇄물과 컴퓨터파일 정리는 20주년 공간 개선과 연동하기로 함에 따라 중단함. 영구보관용 사진과 영상자료 정리 진행 중

6. 참여사회

- 200호 발행과 홈커밍데이 행사를 잘 마무리함. 개편된 참여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높았음.

• 약명 및 보완과제

-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웹이미지는 예년에 비해 많이 제작했으나, 새로운 콘텐츠 전달 형식인 인포그래픽은 3개 제작에 그쳤음. 콘텐츠 제작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사업 외화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고, 각 부서별/사업별/대상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 SNS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애초 연 4회 설문조사를 계획했으나, 잦은 조사에 따른 모니터단의 피로도를 감안해 횟수를 3회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온라인 개편은 20주년 사업과 연동해 진행하기로 하고 2014년으로 연기함.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맞춤형 후원자 관리 프로그램 연간 운영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관리 시스템 안착
- 공간개선 사업 진행(20주년 위원회 사업)
-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및 실행(20주년 위원회 사업)

• 주요활동 및 성과

1.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부서 임원(실행위원) 포함 전현직 임원 DB 구축 1차 완료
- 전직간사 DB 구축 완료

2. 맞춤형 후원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회비 및 창립기념 모금 참가자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 진행함.
- 일정 금액 이상 모금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간 참여사회 발송을 정례화함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대외여건을 고려해 보류함.

3. 사무처 운영 및 관리

-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 인사 DB 정비 완료
- 전체 간사회의 정례화를 정착시키는 중
- 연간 사무처 일정을 사전에 기획하고 진행하여 사무처 운영을 안정화함.

4. 공간개선 사업

- 20주년 공간개선기획단을 구성, 리모델링의 방향과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있음. 2014년에 개선안 확정 후 공사 착수할 예정.

5.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산하에 상근역량강화 소위를 두고 상근자 FGI 진행 등 평가와 개선방향 논의를 진행함.
- 상근자역량강화 방안 보고서를 마련하여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에 제출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전반적으로 사무처 조직 운영이 안정화되었음.
- 20년 인적 네트워크 DB 구축은 완료했으나, DB를 활용한 소통 및 멤버십 강화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음.

연대활동

○ 2013년 주요 연대활동 평가

갑의 횡포에 맞선 ‘을’들과의 연대

2013년은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연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되었음. 밀어내기 횡포를 견디다 못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직접투쟁을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민변, 전국유류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사건을 고발하고 연대에 나섰음. 갑을관계에 있는 ‘을’들이 스스로 단결할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연합회(준), 전국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롯데제벌피해자모임, 케이티피해자모임 등 당사자 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함. 3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변과 함께 제출하였고 통과를 위한 활동을 벌여 2013년 7월 법률 개정을 이끌어 냈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사자들과의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음.

특검 실시 촉구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연대

지난 해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변 등과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기점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진상규명 연대활동을 시작했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지난 6월 결성하여 촛불집회를 연말까지 매주 개최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함. 또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서울경찰청 소속 1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후 국가보훈처와 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개입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11월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임명 청원을 국회 제출하였음. 12월 18일에는 대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종로 보신각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했음. 참여연대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사업은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임.

교육비·주거비·이자 부담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지출에서 큰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및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과제임. 이에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를 통해 국가장학금 모니터링 및 고등교육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했고,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세입자들의 당사자 조직인 전국세입자협회를 발족을 지원하였음.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의 재개발 조합 운영 감사,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냈음. 가계부채 대책 촉구, 이자폭리,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민금융보호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진행했고, 미흡하지만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음. 2014년에도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지속할 예정임.

쌍용차 노조, 전교조 등 탄압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참여연대는 정리해고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여야 정당이 약속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이행과 정리해고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정리해고 해결을 위한 농성에 적극 연대하였으며, 7월에는 경찰의 자의적인 대한문앞 집회금지에 맞서 집회금지통고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또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이를 함께 규탄하였고,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일주일간 진행하며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였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연대

2011년 5월 출범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18개 시민사회·종교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공동집행위원단체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음. 2013년도에는 제주 해군기지사업의 안보, 환경, 인권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정집중방문의 날,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영화 상영,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함. 특히 세계교회협의회, 민중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아태지역 해양의 군사화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연대를

이끌어내는 활동 진행. 추후에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공론화와 더불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관련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벌금을 받은 활동가 및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엔 메커니즘 활용 등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국제인권네트워크는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공동사무국을 맡고 있음. 2013년에는 UPR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을 통해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2014년에도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4. 3. 8. 현재 국내연대 56개 단체, 국제연대 6개 단체 가입
-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등 2개 단체와 ‘참여연대 공동체’ 협약을 맺고 있음

국내연대 - 상설 연대기구 (10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최저임금연대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 (46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심 바로잡기 운동본부	2014	복지노동팀 /경제조세팀
FTA대응 범국민 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2013	경제금융센터
중앙정부예산감시모임	2013	조세재정개혁센터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2013	경제조세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2013	평화군축센터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13	사회복지위원회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2013	노동사회위원회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총체적대선개입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	2013	행정감시센터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2013	의정감시센터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3	시민감시1,2팀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철도공공성시민모임	2013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
공무원노조 법적지위인정과 해직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2012	노동사회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2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권리 내놔라 운동본부	2012	의정감시센터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2012	사회복지위원회
표현의자유를 위한 연대	2011	공익법센터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2011	민생희망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2011	의정감시센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사회복지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2010	민생희망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2010	사회복지위원회
공간기구감시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KBS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2010	노동사회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 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2009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09	사회복지위원회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행정감시센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	민생희망본부
국제인권네트워크	2008	국제연대위원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008	민생희망본부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03	민생희망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999	공익법센터

※ 활동종료 등으로 2014년 해소/탈퇴가 확인된 연대기구 (16개)

2013 새로운교육 실현국민연대

MB언론장악심판MB낙하산퇴출,공정보도쟁취를위한공동행동

PD수첩사수 및 언론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파업승리와 금융공공성쟁취공동대책위원회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민간인불법사찰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비상행동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비정규직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 공동행동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의불법고용근절및근로기준법준수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국제연대 (6개)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소송/감사청구 성과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03.04. 연세대 학생 1인과 참여연대,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과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해 연세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2009.12.17. 1심 일부 승소

2013.11.28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 최종 승소

대한문앞 집회금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3.06.27 대한문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장이 금지처분을 통고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2013.07.16. 1심 판결선고 원고 승

2014.02.21.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승소 확정)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 감사원 공익감사

2013-02-19 이동흡 전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확인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03-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2013-12-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 관련자에게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전국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 교육부 조사

2013-03-18 교과부(현 교육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 감사 청구

2013-06-17 교육부 조사 결과 대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하여 가계곤란 장학금이 그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됨.

2014 사업계획

활동 목표와 방향
20대 중점과제
20주년 특별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2014년 일정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4 활동 목표와 방향

• 중기(2014-15년) 중기활동 목표

- 권력감시 확대를 통해 정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견제력 형성
- 활동 내용과 방식의 대중성 및 현장기반 강화
- 시민참여 기반 확충과 주체 형성
- 참여연대 장기 비전 및 구조개혁안 확정과 1단계 실행계획의 실천

• 2014년 표어 : 참여연대 20년, 함께 만드는 꿈

• 2014년 5대 활동 방향과 중점과제들

1.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

-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 유권자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폐지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감사제 도입
-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 통제 저지
-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 개입 감시

2.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2014년

- 경제민주화 지역공동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내실화
-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 복지국가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세대 간 소통과 연대
- 복지국가 현실화를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삼성노동자, 쌍용차노동자,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
-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연대 *

3.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 한미일 군사협력·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연대 *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연대 *

4. 젊고 활기찬 참여문화 공동체 만들기

-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 모임' 신설
- 참여연대 홍보 기획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 공간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5. 미래를 준비하는 강건한 참여연대 만들기

- 성찰과 비전 보고서와 20주년 선언문 채택
- 20주년, 신입회원 2,000명 맞이하기
-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20돌 생일잔치
- 20년 지기 참여연대 공동체 형성
-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 표시는 주요연대과제 참조

중점과제 1. 국정원 등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 사업배경

- 2013년 중 참여연대 단독으로 또는 국정원시국회의나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만족할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함
- 규명해야 할 의혹들을 밝히고 부당한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내놓도록 계속 노력해야 함

• 실행부서

- 시민감시2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특검 실시와 수사방해 관련자(남재준 국정원장 등) 교체 요구

-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수사 실시 촉구활동 지속
-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수사를 방해했거나, 불법행위에 관련되고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해임 요구

2.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른 추가 요구 제시

- 김용판, 원세훈, 이태하(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 기소되어 재판중인 이들에 대한 재판 모니터 및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요구 제시

3.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제도화

- 국회가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 방안의 시행 여부 모니터링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평가 및 국정원 개혁 캠페인 지속

4. 국정원시국회의 등 시민사회 공동행동 유지

-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참여행사 지속하고, 국정원시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을 통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진행

중점과제 2.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공익제보자 신분보호조치 신청,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취소요구, 피해회복 소송지원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음
- 나아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일에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을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 공익제보자 지원운동을 시민참여형 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공익제보자별 시민지원 캠페인

- 지원해야 할 공익제보자 사례 발생 시, 공익제보자 응원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 항의/응원/지원요청 엽서 보내기, 응원 광고/현수막, 응원메시지 남기기 이벤트 등

2. 공익제보/내부고발 시민인식 향상 캠페인

- 11~12월 중 공익제보자의 밤(12월 중순)을 앞두고 집중캠페인

3.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보와 지원방법을 제공하는 매체 마련

- 공익제보자 사례를 소개하고 지원방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개설, 운영
-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도서 출판, 영상물 제작 등

중점과제 3. 유권자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폐지

• 사업배경

-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비롯해, 정당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는 정당법 조항 등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국회 회의 방청과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 금지 등 폐쇄적이고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시작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체적 성과도 거두어야 함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당설립 등에 대한 부당한 규제 폐지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선거법 93조1항, 시민사회의 시국강연회·집회·서명운동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 101조, 103조, 105조 등의 폐지를 위한 토론회, 언론기고, 거리캠페인 등
-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3조, 17조, 18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토론회, 언론기고, 거리캠페인 등

2. 폐쇄적이고 시민과 동떨어져있는 국회 관련 제도 개선

- 사실상 허가제인 국회 회의 방청 규칙 개선, 국회 담장 앞 100미터(의사당으로부터는 사실상 3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위한 집중행동, '시민정치주간' 기획 등

중점과제 4.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 사업배경

-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특별수사기구로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3년에 국회가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당과 정부의 사실상 공약폐기 또는 방관적 자세로 인해 제도 도입이 무산될 상황
- 여당과 정부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상설특검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되, 실효성 있는 상설특검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실행부서

- 사법감시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상설특검제 도입 촉구 집중행동

- 상설특검 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 규탄 및 공약이행 촉구 캠페인
- 실효성 있는 상설특검을 위한 2가지 핵심요소(상설기구로서의 특검 존재, 여당의 동의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특검 수사 요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2. 상설특검 여론조성과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자료 만들기

- 반대주장 반박과 필요성 등을 담은 시민홍보 및 공익입법 로비용 홍보자료(영상, 팸플렛 등) 제작

* 2월 말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참여연대 2014년 중점과제를 최종 선정한 뒤에 발생한 일로, 총회자료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 도입되는 제도는 상설특검이 아니며 특검 수사 시작이 다수당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없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상설특검 도입 목표를 유지하며, 2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운동을 벌이고, 새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중점과제 5.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 통제 저지

• 사업배경

- 지난 수년간 방송심의 제도를 이용해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한 징계조치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었음
- 이런 상황이 방송심의규정 개악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2014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교체되는 만큼, 방송심의제도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통제 시도를 저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공익법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방송심의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강화 및 시민사회 관심 제고

- 심의예정 사항과 결과, 심의위원별 입장 등 방송심의위의 활동을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방송심의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이기
-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활동 종료에 맞춘 방송심의위 평가보고서 등 발표

2. 부당한 심의에 대한 항의활동 강화

- 피켓팅 등 오프라인 항의행동, 온라인 항의행동 등 부당한 심의 반대 및 규탄 시민행동 조직
- 심의위원에게 의견서 보내기, 언론매체 기고를 통한 부당한 심의 반대 및 규탄 여론형성 등
- 부당한 심의와 징계조치 취소 공익소송 제기

중점과제 6.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 개입 감시

• 사업배경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는 참여연대가 주창해온 정책들 중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
-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12년 대선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행위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해야 함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시민 문화는 정착되어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에 집중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아 투표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쓰고자 함

• 실행부서

- 사회경제 및 권력감시 활동부서, 정책기획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좋은 정책' 제안 캠페인

- 참여연대가 그동안 민생/복지/노동/행정개혁/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주창해온 정책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공론화함
- 언론기획, 주요 후보자들에게 정책채택 제안서 발송 및 반영 여부 조사,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 채택한 후보 살펴보기 시민캠페인 등

2. 국가기관들의 지방선거 불법개입 차단 및 감시 캠페인

- 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선거관리 책임기관에 불법 선거개입 감시 요구,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대선불법개입 국가기관들에게 선거중립 요구하기 캠페인
- 국가기관들의 지방선거 불법개입 의심사례 신고 및 내부고발(공익제보) 시민캠페인

3.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캠페인

- 고용노동부와 선관위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전국 사업장 감독지도 촉구, 투표권 보장 요구 및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신고하기 캠페인

중점과제 7. 경제민주화 지역공동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 사업배경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였으나 경제민주화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도 미진함
- 경제민주화 정책의 축소, 폐기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재벌, 보수언론과 함께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퍼뜨려 경제민주화 여론을 희석시키고 있음
- 2013년 참여연대는 '갑을 문제' 중심의 경제민주화 운동에 집중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 차원의 운동은 벌이지 못했음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전국 주요 지역별 경제민주화 토론회 및 대중행사 진행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주대전, 대전충청, 춘천강원, 인천, 경기(수원, 평택 등)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선정, 월 평균 1회 꼴로 각 지역의 경제민주화 현안 등을 다루는 경제민주화 대회 및 토론회 개최

2. 경제민주화 정책 확산을 위한 토론회, 언론기획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정책 공론화 및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 5월 중 진보적 학술단체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경제민주화 현안에 대한 언론기고 진행
- 경제활성화론 비판 및 경제민주화 담론의 확산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중점과제 8.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내실화

• 사업배경

- 중소 상공인 문제, '갑을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및 '을' 당사자들의 어려운 삶은 계속되고 있음.
- 재벌·대기업들은 중소도시와 동네 골목마다 대형마트와 재벌슈퍼, 변종 SSM까지 꾸준히 출점하고 있고, 전통적인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침탈'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생존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고, 단지 '권고'만 할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주요 중소상공인 영역 보호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상인들과의 공동 캠페인
- 도소매, 문구, 고물, 알뜰폰, 휴대폰 개통업, 서점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속한 선정 촉구 활동

2.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
-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 특히 중소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통 재벌들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

중점과제 9.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 사업배경

-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
- 전월세 임차료 인상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등 전월세 문제 해결책 입법 또는 정책 집행이 시급함
- 전국세입자협회 등 임차인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고 있어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한 효과적인 운동 전개도 가능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세부 과제 및 실행방안

1.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주거 안정 캠페인

-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모니터링 및 비판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국주택세입자협회 등 당사자들의 연대 지속
- “나는 세입자다 시즌 2” 시민 수기공모 캠페인

2.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

-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촉구,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
- 뉴타운·재개발 문제 개선과 출구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지자체 정책 대응
- 지방선거 전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서민주거 안정 정책·대책 마련 촉구 활동
- 강제퇴거를 금지 또는 적극 규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중점과제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 사업배경

-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법적 권리로써 보장해주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임
-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박탈(형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기에 처함
- 양극화가 심각하고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법적 권리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4.3-2014.6) : 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운동
- 2단계 (2014.6-2015.6)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운동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사회 각계 선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공동행동
- 기초생활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최저생활 보장제도 지키기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확대 및 공공부조 발전방향 제시

- 부양의무제 완화 등 사각지대 개선운동
-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안 제시

중점과제 11. 복지국가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세대간 소통과 연대

• 사업배경

- 복지국가의 구체적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해 증폭되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및 이에 따른 재정구조와 조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4.3-2014.6) : 청년/지역단체와 함께 하는 복지강좌, 전국순회 복지간담회
- 2단계 (2014.6-2015.6) :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형성 캠페인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지역복지단체, 청년복지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복지국가 캠페인

- 복지국가 청년아카데미 진행
-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이슈에 관한 전국 대학 순회 청년간담회
- 지역복지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복지의제 이슈화

2.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대안을 공유하는 자료 제작 및 캠페인 진행

- 현실에서 겪는 고충과 복지국가의 대안을 담은 동영상 제작
- 복지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웹자보 제작
- 복지국가를 쉽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캠페인 진행

중점과제 1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사업배경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질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임.
-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생계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임.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간부문에 도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 방안

1.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고서 발표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보고서
- 유통업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파악 및 문제제기

2. 좋은 일자리 대안 제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좋은 일자리 대안 제시 및 공론화

중점과제 1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 사업배경

-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부의 분배구조 역시 소득에 비해 매우 불평등함
-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빈약한 복지실태를 감안할 때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매우 시급함.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4.3-2014.8) : 조세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활동
- 2단계 (2014.9-2015.1)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활동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조세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안 및 연구

- 2012년에 발표한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개혁 Best 6'를 보완하고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 발간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공동 연구결과를 묶어 출판물 간행
- 참여연대 내부의 관련 활동기구 및 외부 기관, 전문가와의 정기 간담회

2.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 감시 및 조정 기능 강화

- '예산재정포럼' 구성
- '2015 정부예산 만민공동회' 개최 및 낭비성 예산 삭감(1000억 목표)

중점과제 1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업배경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규제 완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발전하지 않고 있음
-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는 빈발하고 있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미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도입 및 금융소비자 피해사건 대응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요구 및 국회 입법로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촉구
-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처리 현황, 동양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활동 등 정부당국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 금융피해 사건별 공익소송 및 대책방안 제시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안 정비 및 국회 제출
- 국정감사 이전 각 정당별 간담회
- 잘못된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금융소비자 피해를 알리는 인포그래픽 제작 등

중점과제 15.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 사업배경

- 2013년 초 3차 북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음. 한미는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은 미비한 상황. 그러나 미중 간 합의에 따라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감축, 비확산 노력을 점검하고 핵군축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2015년 NPT(핵확산금지협약) 검토회의를 맞아 북핵문제 해결과 역내 핵군축 달성 방안으로서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를 국내외에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4.3-2014.12) :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비핵지대 담론 의제화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2단계 (2015.1-2015.12) : 동북아비핵지대 의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전개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 해법 촉구

- 시민사회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표, 미 의회와 주한 외국대사관 로비 및 의제화 (2-5월)
-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북핵 정책 및 핵무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모니터링 활동
-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결집된 한반도 평화방안에 대해 문제제기
- 국회 핵군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의 사업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의원 핸드북 한국어판 발간 기념 포럼' 개최 등 국회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방안 모색
- 핵무기의 위험성과 핵무기 철폐를 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5대 제안 등 국내 소개

2 동북아비핵지대화 의제화

- 동북아시아 핵위협에 근원적 해소를 위한 동북아비핵지대화 방안 국내외 의제화
- 핵의 위험성 및 동북아비핵지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용 인포그래픽 전시물 제작 및 핵군축전시회 진행.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 전개.
- 2010년 NPT 검토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 이행여부 평가 및 동북아비핵지대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 GPPAC(무장갈등예방국제민간협력체) 동북아위원회와 몽골정부/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 비핵지대 평화대화(일명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촉구 캠페인
- NPT 평가회의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한미일 시민사회 공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중점과제 16. 한미일 군사협력 · 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사업배경

- 최근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센카쿠 섬 국유화, 국방예산 증액,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우경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하에 일본의 우경화 정책들을 묵인하거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북한 혹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한반도 주변에서 상시로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의 군사주의에 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유로 추진되는 확장억제전략과 미사일 방어체계(MD)는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면서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음.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캠페인

-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리즈 팩트시트 발행,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를 활용한 대중 캠페인 진행
-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의 위험성을 알리고 참여를 막기 위한 대중 캠페인
-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개최
- 한미일호주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대응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성명서 발행

2. 동북아 영토 해양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제시

- 동북아 영토갈등이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과의 교류와 협력
- 주민우선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 도서분쟁 예방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시민네

트위크 강화와 "갈등예방/해결 시민 가이드라인" 모색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한국 시민 사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 연대활동

중점과제 17.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사업배경

- 국내 인권상황 악화, 시민사회 활동 공간의 위축, 한반도 긴장고조 등에 따라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의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제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제인권기준으로 국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함
-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엔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여러 권고를 내리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유엔 권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유엔 기구의 활동에 부응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행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국가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 방안 관련 국제연대

-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개혁 관련 서면 보고서(written statement) 제출
- 국가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국정원 평가 보고서 발행

2.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공론화 관련 국제연대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문제점 관련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 대응 방안으로 아시아 기지건설 반대 운동과 연대활동

3.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관련 국제연대

-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국제사회 연대 및 지지 호소
-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 보호에 있어서 국회의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
-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국내 소개

4. 유엔 애드보커시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관련,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병행하는 행사 개최, 주한 외국대사관 및 주제네바 대표부 로비 활동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병행해, 제2차 UPR 권고사항 이행여부 평가 보고서 발행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유엔 제출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인권 공부모임 구성, 국회 파트너십 구축 등

중점과제 18.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 사업배경

- 임시교육, 학점 및 스펙 경쟁, 고액 등록금 부담, 최저임금의 알바노동, 취업 경쟁 및 청년실업 등으로 청년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청년연수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재 13기까지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청년조직 구성 등 체계적인 청년사업을 기획 추진하려 함. 아울러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활성화하려 함.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청년참여 활동기구 구성 및 청년참여 프로그램 확대

- 참여연대 청년조직 및 청년사업전담팀 구성
- 청년 대상 교육/체험/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인턴프로그램 재정비
- 학내 사업 등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시도
- 청년활동 기금 마련, 청년들의 활동 공간 및 역할 지원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 청소년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소년 교육·탐방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모의국회, 모의재판, 워크숍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시도
- 중·고등학생용 참여연대 및 시민운동 안내서와 홍보물 제작

중점과제 19.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 모임’ 신설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그 동안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입회원 만남의 날’, ‘지역회원 만남의 날’ 등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어 이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회원들과 소통을 늘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
- 격월로 진행한 ‘신입회원 만남의 날’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아카데미 느티나무 특강’의 기능을 합친 ‘회원 월례모임’을 신설하고,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하며, 행사의 규모와 횟수도 늘릴 예정. 참여연대의 대표적 회원 소통모임으로 정착시킨 후 ‘지역회원모임’에도 접목시키고자 함.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회원 정체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월례모임’ 신설

- ‘회원 월례모임’ 신설과 정착을 위한 사업전담팀 구성
- 행사 기획과 운영에서 회원 참여 확대
- 시민행동기획단과 연계하여 회원캠페인 활성화 도모

2. 지역회원과의 소통 강화

- ‘월례모임’ 안정화 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회원모임에도 전파
- 기존 연 1회 4~5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던 ‘지역회원 만남의 날’ 정비
- ‘회원의 가게’를 선정하여 참여사회 광고를 통해 소개하고, 지역회원모임 사랑방 등으로 활용

중점과제 20. 참여연대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채널 다변화

• 사업배경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콘텐츠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널리 유통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참여연대 활동의 내용이나 성과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콘텐츠 관리 및 홍보기획력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조직적 지원의 한계와 홍보역량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
- 이에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방식의 다변화, 다양한 유통채널의 활용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실행부서

- 정책기획팀, 미디어홍보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 콘텐츠 홍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 관리
- 콘텐츠 유통채널 점검 및 다각화 전략 마련
- 영상과 디자인을 활용한 콘텐츠, 팟캐스트 등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 개편을 통한 시민 접근성 확대

2. 20주년 홍보 콘텐츠 제작

- 20주년 웹페이지 기획 및 제작, 온라인 홍보 기획 마련
- 참여연대 20년의 기록과 활동성과 알리는 홍보물 제작
- 참여연대 20주년 CI 정비 및 엠블럼, 기념품 제작

20주년 특별과제 1.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 사업배경

- 창립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2013년에 20주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운영 및 분야별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와 한국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조직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실행부서

- 정책기획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분야별 비전과 혁신과제 마련

- 권력감시운동 발전과 사회경제운동 활성화, 국제민주평화연대 강화, 시민참여형 시민친화적 활동 강화, 참여연대 공동체 공고화, 상근인력 강화 등 분야별 논의 진행
- 20주년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분야별 비전과 혁신과제 논의
- <2014 참여연대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2. 조직체계 점검 및 개선

- 시민소통과 참여, 회원확대, 정책기획, 홍보 등 조직운영 분야 강화
- 청년세대를 비롯한 시민 소통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활동기구 구성
- 활동기구(실행위원회) 현황 점검 및 강화, 의사결정/집행구조 회원 참여 강화

3. 활동방식 개선

-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활동방식 진단 및 개선 시도, 새로운 전형 마련
- 각 부서별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4. 상근역량강화

- 참여연대 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마련
- 채용강화와 상근자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20주년 특별과제 2.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 사업배경

-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회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회원을 2,000명 모으자는 계획.
- 회원의 회비와 회원·시민의 부정기 후원으로 독립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참여연대 회원들의 큰 자부심. 참여연대 20년 평가과정에서 하루빨리 별도의 후원행사 없이 '회원 회비 100%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20주년위원회 대다수가 공감한 바 있음. 회비로만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회원 참여가 필수적임.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회원확대 전담기구 구성 및 회원확대 캠페인

- 과거 '민들레사업단'과 같이 회원확대위원회 등 회원확대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하는 회원확대 전략 마련
- 연중 회원/임원/상근자 캠페인, 회원확대용 문화행사 등을 통해 회원확대

2. 가입가능성 높은 시민층 발굴 및 회원가입 홍보 강화

- 참여연대 회원가입 가능성 높은 시민층 발굴 및 그에 맞춘 홍보전략 마련, 실행
- 소셜네트워크망/대안매체를 통해 홍보 강화
- 매월 참여연대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회원가입 홍보 메시지 선정 및 홍보 진행

3. 인적 네트워크 활용 캠페인

-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 홍보 확대 및 이벤트 진행
- 회원의 지인(피권유자)에게 참여연대 홍보물 대리발송, 회원가입 권유 매뉴얼 배포 등

20주년 특별과제 3.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 잔치

• 사업배경

- 참여연대 활동을 함께했던 임원, 회원, 자원활동가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참여연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0주년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함
- 이를 통해 참여연대 20년의 역사와 성과, 스무 살 참여연대의 각오와 목표를 밝히고자 함.

• 실행부서

- 정책기획팀, 미디어홍보팀, 운영기획팀, 시민참여팀

• 세부과제

1. 20주년 행사기획단 구성

2. 20주년 창립기념식 행사

- 20주년 선언문과 <2014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발표
- 창립 20주년 기자간담회, 사진전, 영상물 상영 등 진행
- 회원, 시민, 국내외 인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응원과 격려 메시지 받기
- 명예회원 선정, 20년지기 회원 등 회원 감사 사업

3. 20년 축하 시민한마당

- 회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20주년 축하 한마당 진행

4. '홈커밍데이'와 '오픈하우스' 주간 행사 등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확인

- 회원, 자원활동가, 전/현직 임원, 전직간사, 자원활동가 초청 참여연대 운동 20년 전시, 투어, 기증품 경매전, 나눔장터 등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홈커밍데이 등 행사 진행(각 활동기구별 홈커밍데이 병행)
- '자랑스러운 회원'(가칭) 추대 및 감사 행사 진행

- 전현직 임원, 전현직 간사 멤버십 강화 프로그램 진행

5. 출판 및 학술행사

- 참여연대 활동의 의미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평가분석하는 학술행사와 단행본 발간
-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단행본 <한국사회비전보고서>(가제) 발간, 연속강연회 혹은 대토론회 개최
- <참여연대 20년 백서>, 단행본 <참여연대 20년 20장면(가제)> 출판 등

20주년 특별과제 4.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 사업배경

- 참여연대 활동력을 유지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세대 사업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어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원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 발전기금을 모금해, 참여연대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함

• 실행부서

- 운영기획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20주년 모금 기초

- 여러 가지의 목적형 기금으로 구성된 참여연대 20주년 기념 발전기금(가칭) 모금
- 연 평균 후원금의 2배인 7억원 모금
- 모금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감사의 뜻과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선물 증정

2. 모금위원회 구성 및 일정에 따른 집행

- 3월초까지 전/현직 임원과 회원, 상근자가 참여하는 모금위원회 구성 및 발족,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 6월까지 1차 집중 모금, 7월 이후 2차 집중 모금기간 설정

20주년 특별과제 5. 공간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많은 시민,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참여연대 사무실을 더 많은 시민과 회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함. 이를 통해 참여연대 운동 및 시민운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접촉면을 더 넓히고자 함. 또한 상근자 및 자원활동가들의 업무 공간도 효율적으로 재구성함.

• 실행부서

- 운영기획팀, 정책기획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6월 중으로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 완료

2. '시민의 놀이터'로 개방

- 전시와 행사 등 카페통인 활용도를 높이고, 지하 강당(느티나무홀)을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보수함
- 대규모 행사, 회의실, 시민모임방 등으로 활용하도록 2층 전면 리모델링

3. 업무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 최소 70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 재구성
- 상근자 휴게실 배치

4. 참여연대 역사와 활동 홍보를 위한 건물 내부 공간 효율적 활용

- 계단, 통로, 실내 벽면 등을 홍보공간으로 이용
- '참여연대 아카이브' 등 투어코스 마련
- '후원자의 벽' 등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식 설치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국회 및 의원 평가 방법 다양화, 안정성 확보
- DB사이트 콘텐츠 다양화 및 대중화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유권자 의사표현 제한 선거법 93조 1항 등 폐지> 실행

2. 19대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로, <주요 법안 평가 및 참여연대 '의원평가지수'> 보고서 발표
- 주요 법안의 발의자 명단, 의원 표결 결과, 특별위원회 평가 등 다양한 주제로 국회 평가자료 다수 발행

3. 의원 DB사이트('열려라국회') 개편 완료

- 이 주의 주목 의원, 주요 법안에 대한 평가, 정치일지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
- 개편 전후 베타 서비스, 사이트 홍보 활동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검찰 민주화와 견제 방향의 검찰개혁 과제 발굴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제도 개혁 시행상황 점검과 시정사항 공론화

• 2014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실행

2. 검찰 개혁 과제 발굴

-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 전문가 참여 세미나 연중 진행
- 검찰 외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상설특검) 도입에 적극 노력

3.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에 이은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발간
- <그 사건 그 검사 DB> 사이트 보완, 활성화 방안 마련

4. 대법관 교체기 대응

- 상·하반기 대법관 2명의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판결 분석, 인사 청문회 대응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평가 보고서 발간, 대법관 추천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5. 모니터링 보고서의 안정적 발간

- 정기적으로 발간할 연례 보고서를 확정하고, 그 외 사안별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발간 계획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발간

6. 법원 감시 토대 마련

- 필진 확대, 비평 횟수 증대, 시민참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비평 활동 강화
- 고위법관 인사 시기 활용을 위해, 주요 판결 담당 판사 모니터 자료실 구축 시작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부패방지 및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안정성 강화

• 2014년 주요과제

1. 박근혜 정부 인사 모니터 및 인사검증 강화방안 마련

- 인사검증제도 개혁방안 마련 및 사회적 여론 형성
- 인사 평가 모니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2. 정부와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모니터링과 관련 제도 개선

-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모니터 보고서 발표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부정청탁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반부패 독립기구 신설 관련 의제 제기 및 입법운동

3. 부패방지와 정부 투명성 관련 도서 출판

- 부패방지와 정부 투명성 관련 대중 도서 발간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자별 실질적 지원 지속 및 확장
- 법/제도 개선 과제 추진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만들기> 실행

2. 공익제보자 지원 및 의인기금 홍보 강화

- 지원 대상 공익제보자 신분보호조치 및 불이익취소 요구 활동
- 공익제보자에 대한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확보
-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 홍보를 강화하여 기금을 확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3. 공익제보자 보호관련 제도 개선

-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 입법로비
- 서울에서 제정된 공익제보지원조례 사례를 전국으로 보급하는 활동

4. 제4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및 의인상 시상

공익법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 소송, 제도개선 활동
-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공익소송 발굴 및 진행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 통제 저지> 실행

2.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 개선과 국가의 통신감시 규제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관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권, 수정 및 삭제 요구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화 및 소송을 통한 선례 만들기
- 국가에 의한 통신감시를 규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제적 기준 국내 보급 등

3. 공익변호사 양성

-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익소송 경험과 사례 등을 전수하는 강좌(가칭 정의를 위한 소송 학교) 개최
- 로스쿨 실무수습생 2명 내외 수용

4. 공익소송 발굴

- 멀티플렉스 상영관 독점문제 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공익소송에 적합한 사례 발굴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중소기업인 및 지역 경제 살리기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살리기
-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 사회권 운동 준비 및 기반 마련
- 철도민영화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내실화> 실행, 이외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 대리점보호법, 변종SSM 규제법, 대기업상생협력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
- 대기업 불공정행위 보고서 및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 실태 보고서 발행, 유통분야 재벌들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및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촉구 활동
- 서울시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와 불공정상담센터 활동 감시 및 개선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의제 공약화 운동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인단체 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및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2. 중점과제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실행

3.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및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기본금액 증액 등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등록금 인상근거·적립금 사용내역 공개 촉구 전국 동시다발 정보공개·감사청구 캠페인, 대학 교육비 의무공개제도 정비 및 공익소송 제기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추진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대상 확대
- 대학법인의 법인 부담금, 기숙사비,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이사회 및 공익이사제도, 입학금 문제 등 고등교육 이슈 대응
-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공교육 발전, 사교육 문제 관련 연대 활동

4.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실현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진행,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정책 감시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민사소송 진행, M-VOIP차단 공익소송 제기

5. 서민금융 보호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추가 개정
- 파산법, 과잉대출규제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제·개정
- 대부업 광고규제 법안 통과 및 대부업 폭리와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 촉구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 서민금융 정책 감시

6. '생활 속 시민권리 찾기' 캠페인

- 시민·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익소송과 정책개선 등을 촉구하는 '생활 속 시민권리 찾기' 캠페인
- 참여연대-경향신문 '생활속의 시민권리를 찾아서'를 비롯한 언론기획시리즈 진행
- 금융, 통신,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권리 침해 대응과 공익소송 제기

7. 사회권 운동 준비 및 실행

- 사회권 운동 연구기획 모임을 통한 교육/주거/중소상공인/일자리 운동 발전
- '사회권 헌장' 마련 및 언론공동기획 진행

8. 기타 20주년 사업 및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식품안전 문제, 사행산업 규제 감시
- 공공부문 민영화 공동 대응
- 참여연대 공익소송, 민생입법 20년 역사,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민생입법 이야기"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금융공공성 제고
- 경제활성화론에 맞서 경제민주화 방어와 경제민주화 운동의 전국화
- 가계부채·금융감독체계·금산분리 등 금융정책 개입과 전문성 제고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의 '울' 친화적 개혁
- 센터의 안착과 정책 전문성 확보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경제민주화 지역공동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실행, 이외 경제민주화 운동

-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정착과 지배구조개선 상법 개정 공약 이행 감시

2. 중점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실행

3. 금융 거시건전성 이슈에 관한 정책 개입

- 가계부채 문제 해법 제시 및 금융-산업분리 정부 정책 감시
- 금융권력(금융회사 및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오남용, 직무유기 및 위법행위 감시
- 론스타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 효과적 대응

4. 공정거래사건의 '울' 친화적 집행체계 제도개혁

- '사인금지청구제' 도입, 분쟁해결절차 개혁, 공정위 권한의 분산과 위탁
- 공정거래사건 처리 절차 단축 및 규범화, 공정거래위반사건 '동의의결제' 확대 감시
-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운동

5. 활동역량 제고 및 홍보 강화

-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 확대 및 실행위원 보강
- 분기별 최소 1회 인포그래픽 제작, 동영상 활용, 웹사이트 콘텐츠 등록 보강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보건의료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의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발행 지속 및 출판사업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사업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실행
2. 중점과제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세대간 소통과 연대> 실행
3.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 제시 및 제정·조세부담 방안 공론화
 -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 발행
4.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화
 -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지역복지정책 제안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제시
4. 공적연금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공론화 및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공론화
5.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보장성 확대
 -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및 의료공공성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시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비급여 축소, 부과체계 개선 등) 운동
6.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보육운영위원회 활성화, 보육교사의 공적 고용 등 보육공공성 확보 대안 제시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관련 토론회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제기

7.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사업 진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년 중 후반 10년 자료 정리 및 출판사업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성과와 전망, 한국의 복지운동, 사회보험 통합 등 발전 방향, 통일시대의 복지 등 복지국가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목표로 하는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8. 월간 '복지동향' 안정적 발행 및 지역, 청년복지단체와의 콘텐츠 교류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공공부문, 민간영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니터링
- 노동권보호를 위한 연대활동과 관련 법 개정
- 사회보험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실행

2.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 등 삼성그룹의 노동권 침해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산업재해 관련 노동행정 모니터링
-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관한 국제사회 문제제기
-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권 탄압 사건에 대한 국내·외 연대를 통한 지원

3. 공공부문 노동행정 모니터링 및 공공부문 노동정책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 및 노동법 준수 실태 조사
-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노동정책 제안

4.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공약 이행과 실태 조사
-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 노동행정 조사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실태 점검
- 실업부조 등 근로빈곤과 저소득층의 취업지원과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6. 노동문제 관련 정기포럼(심포지엄) 개최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미래지향적 조세재정 체계 재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낭비를 막고 국민을 위한 예·결산 감시 확대
- 시민들과 함께 하는 조세재정운동의 연구 및 확대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실행

2.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 감시 및 대안 제시

- 비과세 감면 제도, 담배세, 탄소세 부과 등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입장제시
-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는 미래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 활동

3. 시민 참여 공감 캠페인

- 다양한 연령이 어울려서 세금을 주제로 하는 백일장 프로그램 추진
- 대학생 논문대회, 수필 공모전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 기획

4. 세금과 재정 문제를 일상의 언어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 매일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세금과 복지, 양극화와 불평등, 그 대안을 다루는 인포그래픽 자료 제작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평화국가 담론 확산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지속
- 군사주의 확산 저지 및 외교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 촉구하는 시민행동 전개
- 평화운동의 지지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운동 전개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2. 중점과제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동북아 군비증강 감시 시민행동 전개>

3. 평화권 실현

- 평화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에 제출(2월)
- 평화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한 인포그래픽 등 홍보물 제작
- 유엔에서의 평화권 선언 채택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 발송
- 평화권 선언 관련 국내외 애드보커시 활동

4. 북한인권문제 대응

- 북한인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문서 발행 및 국내외 공론화
-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응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의견서 발행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최종 보고서에 대한 토론회 개최

5.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지속

- 동북아 군사갈등 속 제주해군기지가 초래하는 안보적 문제점 제기
- 제주해군기지건설의 환경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국내 연대사업 및 공론화 작업

6. 군사주의 문화 강화시키는 중복담론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 중복프레임이 안보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중복담론이 분단체제에 악용되는 현실 밝히는 자료 제작
- 국가기관들의 안보교육 자료와 안보교육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행

7. 파병반대 논리 및 대안 구체화

- 인도적 지원 명분의 파병 반대 논리 및 대안 제시 토론회, 아프가니스탄 재건팀(PRT) 활동 한,미,영 시민사회 공동 평가 이슈리포트 발행, 파병제한법 입법운동

8. 평화활동의 주체로서 청년·시민 육성

- <정전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등 참여연대 발간자료 등을 활용해 평화담론 확산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자 양성 프로그램(Training of Trainers) 개발
- 평화군축박람회 전시물 지역순회 전시 및 캠페인 조직
-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관점 제시하는 평화교육 강의 및 강의 매뉴얼 개발, 시민평화포럼을 통해 대학 및 지역단체 차원에서 진행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제언 활동과 국회 파트너십 강화
- 아시아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제고 및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 강화
- 참여연대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제 애드보커시 효과 극대화
- 국제개발,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내외 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운동 전개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실행

2. 공적개발원조(ODA) 감시운동

- 새마을운동, 해외 지식공유사업(KSP) 등 ‘한국형 원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원형 및 세계화사업 평가 보고서, KSP 현황 및 성과 평가 보고서 발행 및 토론회 개최
- 원조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수출입은행의 관행 및 폐쇄성 개선을 위한 기획 정보공개청구, 국회 토론회 등 원조투명성 캠페인 2.0 진행
- 원조의 군사화 감시 및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 파병에 대응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및 토론회 개최

3. 아시아 연대

-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현황을 짚어보고 연대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아시아 ‘이야기마당’, 칼럼 ‘아시아생각’의 정례적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제고
- 광주아시아포럼 개최,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연대활동

4. 참여연대 영문 홍보

- 참여연대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제 애드보커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문 웹사이트 개편 및 영문 홍보물 갱신

5. 국제개발,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내외 활동가 양성

- 국제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training of trainers) 개발
- 외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쉽 및 펠로우 프로그램 개발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2014년 주요과제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강좌의 안정적 진행

2.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교육의 가치, 목표, 내용, 방법이 통일된 시민교육 개발
- 기획자, 강사, 참여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만드는 시민교육 발전
- 새로운 교육 참여자를 위한 교육 시도
- 새로운 형식의 교육과 모임 촉진
- 독서클럽, 워크숍 등을 통한 삶과 삶, 행동, 실천이 통합되는 배움 시도

3. '민주주의 학교' 강좌 체계화 및 대표강좌 개발

- 민주주의 학교 대표강좌 개발 및 시행
- 민주주의 학교 개발 연구팀 운영

4.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상근자 세미나, 참여연대 활동기구 주관 시민교육 지원 등을 통한 참여연대 시민 교육역량 강화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 2014년 주요과제

1. 연구·학술

- '평화복지국가' 담론 연구 심화, 세부 연구 주제 설정 및 연구 착수, 심포지엄 개최
- 시민사회 현안을 주제로 참여사회포럼 개최.

2. 출판

- 단행본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정치적 조건과 주체역량》(가제) 발간
- 단행본 《민주정부의 사회경제개혁과 유산 - 성과와 이행 실패》(가제) 발간
-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 지속 및 확장성 제고

3. 시민정치시평 발행

-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 <시민정치시평> 발행 지속

4. 조직운영

- 후속 세대 연구자 확보 경주
- 행정 업무 효율화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소속감 고취
- 참여연대와 만나는 공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촉진
- 참여연대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청년/청소년 참여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실행
 2. 중점과제 <회원 소통 확대를 위한 '일례모임' 신설> 실행, 이외 회원 소속감 고취 활동
 -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원행사 개최
 3. 20주년 특별과제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실행
 4. 20주년 특별과제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실행
 5.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 참여연대 20주년 공간개선에 맞춰 개방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 참여연대 방문 및 사무실 투어(tour) 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생, 청소년, 은퇴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춘 시민사업 검토 및 진행
 - 시민운동 참여 욕구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각 활동기구와 연계한 프로젝트형 자원 활동, 단기 자원활동, 주말 자원활동, 청소년 자원활동 등 다양한 형식의 자원활동 프로그램 마련
- ### 3. 기타
- 회원 생애주기별(신입, 1년지기, 10년지기, 20년지기 회원) 감사 프로그램, 회비증액 회원 감사 프로그램 등의 정비 및 개선
 - 평생회원, 명예회원 등 회원제도 정비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총괄 (20주년위원회 사업)
-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및 교육 혁신과 강화
-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등 정책기획 기본 사업 강화

• 2014년 주요과제

1. 20주년 특별과제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실행
2. 20주년 특별과제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실행
3. 20주년 특별과제 <공간 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실행
4.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및 교육 혁신
 - 상근자 채용 관리와 과정 혁신
 - 신입간사 교육 및 상근자 업무교육 혁신
 - 상근자교육위원회 부활 및 활동지원
5.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등 정책기획 기본 사업 강화
 - 정책기본문서 보완 및 목표관리
 - 참여연대 차원의 정책기획 사업 및 연대사업 지원
 - 활동방식 혁신 방안 마련과 적용
 - 참여연대 활동 DB화 및 계량적 평가
 - 장기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영구보관자료 관리 지침 개선
 - 500인 회원모니터단 운영 및 정기 설문조사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년 성과 및 20주년 기념사업 홍보
- 참여연대 활동 홍보를 위한 기획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 참여연대 소재지 중심의 지역 홍보 강화
- 위기관리 강화

• 2014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참여연대 홍보 기획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실행

2. 참여연대 주변 지역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참여연대의 소재지(통인동)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문화공간, 공공시설, 카페 등 지역시설과 공간을 참여연대 홍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

3. 위기관리 강화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참여연대 왜곡, 비방 기사에 대한 대응 강화
- SNS, 포털 사이트를 통한 참여연대 왜곡, 비방 게시물 점검 및 시정
- 기자, 여론 주도층 등에게 참여연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발전기금(가칭) 모금 (20주년위원회 사업)
- 공간개선 사업 진행 (20주년위원회 사업)
-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소통 및 멤버십 강화
-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체계화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2014년 주요과제

1. 20주년 특별과제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실행

2. 20주년 특별과제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실행

3. 20주년 특별과제 <공간 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실행

4.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통합 관리 체계화

- 회원, 임원, 전직간사 DB 통합관리 체계화
- 전직 임원 정보 개선을 위한 2차 DB 정비 진행
- 미납회원, 보류회원 정보관리 강화
- DB 관리 안정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 강화

5.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운영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연대활동

2014년 주요 연대 과제

-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 좋은 정책 확산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
-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대
- 기초법 개악 저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 삼성노동자, 쌍용차해고노동자,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 공공서비스 민영화 감시와 대응을 위한 연대
- 한반도 평화와 핵 위협 해소,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연대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연대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2014년 일정표

	3월	4월	5월	6월	7월
활동기구	보편적기초연금도입대학순회간담회 북한인권법관련대안의견서 유권자표현제한선거법토론회 국정원개혁토론회 국가기관대선개입사건진상규명캠페인(연중) 박근혜정부1년검찰보고서 좋은정책확산지방선거캠페인시작	주택임대차정책보고서 금융소비자보호토론회 경제민주화지역공동캠페인시작 제4회세계군축행동의날캠페인 유권자표현의자유국제기준보고서 관련개입없는지방선거캠페인시작 권력비판방송부당징계 보고서	유통업계시간선택제일자리보고서 사회보험지원사업평가 토론회 지방선거노동자투표권보장캠페인 방송통신심의위3기평가토론회 <민주정부의사회경제개혁과유산>도서발간 안보교육실태보고서 한반도평화정책보고서	중소상공인보호지방선거공약캠페인 사회보험사각지대개선토론회 군사동맹대응국제네트워크구성 중복담론비판토론회 <평화복지국가의조건>도서발간 <열려라국회.통하라정치>시민캠페인 고위공직자임명문제시례보고서	언론기획<나는세입자다시즌2> 복지국가재정확보방안토론회 사회보험사각지대실태보고서 제주강정생명평화캠프 인도적 지원 명목파병 반대 토론회 19대국회전반기주요법안결표보고서 고위공직인사검증개선토론회
시민참여/회원행사	회원월례모임 제20차정기총회 지역회원만남의 날 아카데미봄강좌	회원월례모임	회원월례모임 회원 봄나들이 역사탐방.미술관투어행사 자원활동가2차모집	회원월례모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아카데미 여름강좌	회원월례모임 14기청년인턴프로그램
20주년사업	평가비전위원회회의 개최 발전기금모금위원회/회원확대위원회발족	<성찰과비전보고서> 중간보고 20주년 학술행사	회원과 외부인사공청회	공간개선 공사 20주년위원회전체회의	20주년 백서 완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기구	공공임대주택추진 현황보고서 대기업의골목시장 침투실태보고서 가계부채이슈리포트 조세제도개혁보고서 공직자퇴직후취업 제한연례보고서 대법원구성평가보고서 정의를위한소송학교'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개선토론회 청년고용할당제이행실태보고서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정책의견서 해외원조투명성캠페인2.0 파병제한법 입법캠페인 폐쇄적인국회개선 집중행동	2015년정부예산만민공동회 사회복지위원회20주년기념심포지움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보고서 평화복지국가심포지움 비핵군축 전시회 공익제보자정보 제공웹사이트개설 검찰시민위원영실태보고서	대기업불공정행위 보고서 2015년 보건복지 예산분석보고서 동북아비핵지대화 촉구서명운동 아프가니스탄 재건활동 국내외 공동평가 보고서 공익제보자 보호 시민캠페인 <그 사건 그 검사 DB > 개편	<세상을바꾼공익소송·민생입법이야기>도서발간 2015년 낭비성 예산 삭감 캠페인 사회복지위 20주년 기념 도서 발간 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
시민참여 / 회원행사	회원월례모임 청소년초청프로그램 자원활동가3차모집	회원월례모임 아카데미 가을강좌	회원월례모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지역회원만남의 날	회원월례모임 자원활동가 2014년 4차모집	회원월례모임 회원 송년회 아카데미 겨울강좌 시작
20주년 사업	참여연대 20주년 단행본 출간	창립20주년 창립기념식 <성찰과비전보고서>. 20주년 선언문 발표 시민축하한마당	홈커밍데이와 오픈하우스		

2013 결산 및 2014 예산

회계감사보고
2013년 결산안
2014년 예산안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채이배 (회계사)
-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제20기)

총평

- 2013년(제20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19기) 대비 흑자 전환하여 당기순이익 16백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 증가와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등으로 수입액(매출액)이 30백만 원(1.55%) 증가하였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비용(판매비 와 관리비)이 35백만 원(1.77%)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은 11백만 원 감소하고,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도 14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 는 37백만 원이나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33백만 원이며, 4백만 원은 대차대조표 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된 것 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46백만 원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현금성 항목을 고려하여 2013년 현금흐름은 산출한 결과 84백만 원의 현금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 한편, 전기 대비 자산은 26백만 원(0.55%) 증가하였고, 부채는 10백만 원(1.0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중 당좌자산이 72백만 원(9.60%)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외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부채 역시 정상적인 변화 외에 특이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권고사항

-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 만기도래 시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월별 자금 수입지출 계획수립, 이자수익이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가입 등을 권고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폐쇄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 및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2013년 결산안

손익계산서

제20기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제19기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액	금액
I.매출액	1,980,685,752	1,950,399,886
회비수입	1,476,362,780	1,426,966,395
정기후원금수입	11,370,000	12,96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06,843,846	321,057,493
사업수입	186,109,126	189,415,998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1,980,685,752	1,950,399,886
IV.판매비와관리비	1,930,591,065	1,965,321,175
급여	1,101,698,921	1,058,058,571
퇴직급여	37,206,285	75,177,313
복리후생비	124,073,674	101,383,926
여비교통비	5,811,130	4,882,920
통신비	24,537,460	26,420,340
수도광열비	3,476,370	2,534,070
전력비	25,869,550	27,026,150
세금과공과금	22,922,960	28,576,215
감가상각비 ¹	46,038,869	38,389,779
임차료	5,699,081	6,884,322
수선비	0	2,250,500
보험료	2,779,130	3,119,290
차량유지비	2,215,210	1,834,750
교육훈련비	5,513,880	5,164,240
도서인쇄비	4,814,130	5,130,020
회의비	35,788,710	30,110,850

사무용품비	3,999,880	8,814,600	
소모품비	26,623,190	26,985,920	
지급수수료	76,697,939	74,010,266	
건물관리비	13,494,800	13,270,300	
잡비	1,385,200	12,407,910	
사업비	317,014,176	369,128,283	
발송비	6,343,520	5,794,240	
부설기관회비등	36,587,000	37,966,400	
V.영업이익	50,094,687		-14,921,289
VI.영업외수익	8,700,918		20,092,511
이자수익	8,022,404	14,366,547	
잡이익	678,514	5,725,964	
VII.영업외비용	40,840,160		55,015,303
이자비용	29,972,120	36,423,179	
기부금	10,708,800	11,667,400	
잡손실	159,240	6,924,724	
VIII.법인세차감전 이익	17,955,445		-49,844,081
IX.법인세등²	1,814,860		513,710
X.당기순이익	16,140,585		-50,357,791

1 감가상각비 당기 계상액은 건물 및 차량운반구의 당기 상각비입니다.
2 당기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비용 계상액입니다.

재무상태표

제20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19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0(당)기 금액		제19(전)기 금액	
자산				
I.유동자산		818,958,349		747,217,228
(1)당좌자산		818,958,349		747,217,228
현금		2,555,500		3,531,286
보통예금		449,887,771		364,752,819
정기예.적금		228,023,434		221,960,315
미수수익		3,809,000		0
상근자교육기금		19,236,113		22,311,057
연대기금		1,551,487		1,549,913
도시락기금		672,437		9,027,863
의인기금		99,392,868		99,343,855
공익소송기금		13,829,739		24,740,120
II.비유동자산		3,872,006,342		3,918,045,211
(1)투자자산		30,000,000		30,000,000
장기대여금 ³		30,000,000		30,000,000
(2)유형자산		3,842,006,342		3,888,045,211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21,181,000	1,194,377,436	-185,792,040	1,229,766,396
차량운반구	26,614,810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13,650,728	12,964,082	-3,000,819	23,613,991
자산총계		4,690,964,691		4,665,262,439
부채				
I.유동부채		14,787,820		9,335,385

2014년 예산안

예산손익계산서

제21기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1(차)기	
	금액	
I.매출액		2,412,000,000
회비수입	1,550,000,000	
정기후원금수입	12,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700,000,000	
사업수입	150,000,00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412,0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387,233,280
급여	1,173,997,520	
퇴직급여	130,000,000	
복리후생비	129,000,000	
여비교통비	6,000,000	
통신비	25,000,000	
수도광열비	4,000,000	
전력비	27,000,000	
세금과공과금	24,000,000	
감가상각비	41,235,760	
임차료	7,000,000	
보험료	3,000,000	
차량유지비	3,000,000	
교육훈련비	6,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회의비	37,000,000	
사무용품비	15,000,000	
소모품비	30,000,000	
지급수수료	75,000,000	

예수금	12,930,734	7,968,041
부가세예수금	1,057,866	853,634
미지급세금	799,220	513,710
II.비유동부채	916,202,191	912,092,959
장기차입금	650,000,000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56,202,191	252,092,959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10,000,000
부채총계	930,990,011	921,428,344
자본		
자본총계	3,759,974,680	3,743,834,095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16,140,585		
전기:-50,357,791		
부채및자본총계	4,690,964,691	4,665,262,439

3 장기대여금은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예산재무상태표

제2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건물관리비	15,000,000	
잡비	1,000,000	
사업비	585,000,000	
발송비	7,000,000	
부설기관회비등	38,000,000	
V.영업이익		24,766,720
VI.영업외수익		16,000,000
이자수익	15,000,000	
잡이익	1,000,000	
VII.영업외비용		37,500,000
이자비용	26,500,000	
기부금	10,000,000	
잡손실	1,0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3,266,720
IX.법인세등		199,100
X.당기순이익		3,067,620

과목	제21(차)기	
	금액	
자산		
I.유동자산		963,291,129
(1)당좌자산		963,291,129
현금		2,000,000
보통예금		117,850,919
정기예.적금		708,023,434
미수수익		4,000,000
상근자교육기금		20,197,919
연대기금		1,629,061
도시락기금		706,059
의인가금		104,362,511
공익소송기금		4,521,226
II.비유동자산		3,830,752,582
(1)투자자산		30,000,000
장기대여금		30,000,000
(2)유형자산		3,800,752,582
토지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56,569,960	1,158,988,476
차량운반구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19,515,528	7,099,282
자산총계		4,794,043,711
부채		
I.유동부채		14,799,220

예수금		13,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미지급세금		799,220
II.비유동부채		1,016,202,191
장기차입금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56,202,191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부채총계		1,031,001,411
자본		
자본총계		3,763,042,300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11,522,620		
전기: 16,140,585		
부채및자본총계		4,794,043,711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 개정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정관개정안

□ 개정 이유

-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현행 운영원리를 반영하여 임명과 인준의 범위를 구분함.

□ 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정관 제19조[권한] 본문을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를 임명한다.”를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로 함.

부 칙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를 임명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u>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u>

참여연대 정관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13차 개정)
2011.3.5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2014.3.8	(1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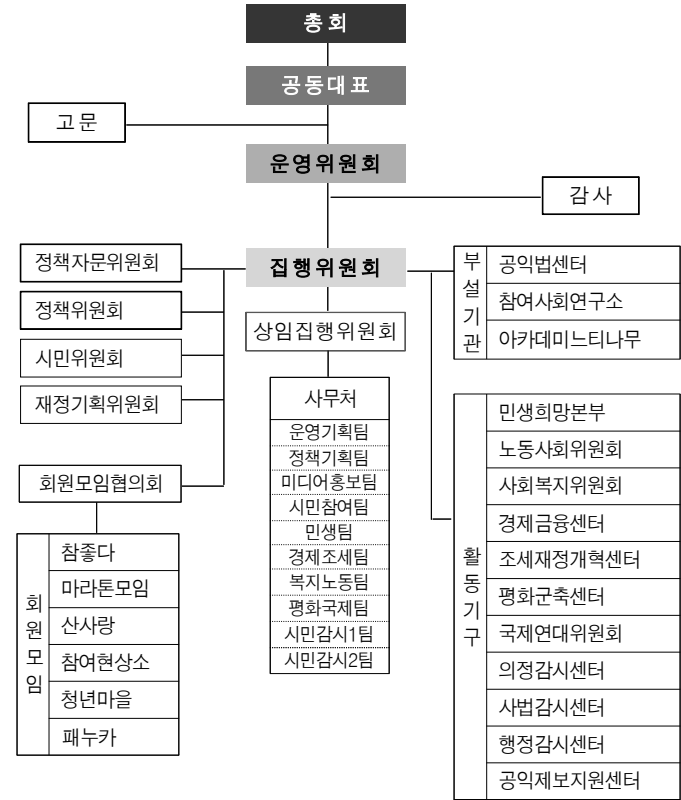
-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기구표

2014. 3. 8. 현재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4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공동대표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김 군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2012~2013 참여연대 공동대표)

[연임] 정현백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2010~2013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김정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춘천교대 교수, 2012~2013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연임] 홍성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상지대 교수, 2012~2013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 감사 선임의 건 (임기 2년)

[신임] 채이배 임시감사 (회계사, 2013년 10월 19일부터 임시감사로 활동)

4.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임기 1년)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52명)

[연임] 구봄(대학생) 김대현(자영업) 김민혜(자원활동가)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영규(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규(자영업) 박상철(자영업) 박열음(자영업)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석락희(직장인) 신영(디자인 회사 운영) 오종철(직장인) 윤형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수필가) 임상웅(자영업) 장슬기(대학생)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조룡

상(직장인) 조민지(단체종사자)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채명묵(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피확용(자영업)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이상 42명)

[신임] 김세경(서양화가) 김진(온라인게임업 종사) 김태엽(자영업) 박희경(자원활동가) 안기석(동시통역사) 양재섭(직장인) 이현정(대학생)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교무) 조규훈(직장인) 한용환(직장인) (이상 10명)

○ 추천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연임] 곽현희(어린이집 교사) 김명수(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성제(공무원) 김요한(직장인) 남경완(어린이북 출판작가) 마석우(변호사) 박찬주(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창근(관동대 교수) 오지영(대안학교 교사) 윤지혜(공무원) 이강원(직장인) 이정현(직장인) 이종춘(경북과학대학 교수) 이해정(중앙대 교수) 정대철(목포포럼 사무차장) 정문영(회계사) 조재현(한국은행 직원) 조정숙(직장인) 지정국(직장인) 최중훈(직장인) 한보리(인도주의적 활동가) 홍부호(직장인) (이상 22명)

[신임] 김기용(전문직) 김은아(교사) 김인식(직장인) 김준호(직장인) 류종길(직장인) 문애술(직장인) 박성준(직장인) 심난숙(직장인) 엄지원(기자) 오형진(대학원생) 이민경(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용구(변호사) 임진희(직장인) 조미숙(서양화가) 조재식(자영업) 한형갑(아파트관리소장) 황세욱(직장인) (이상 18명)

5.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김 군(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이영동(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박현화(회원모임 '참종다' 대표)

2014 임원 명단

공동대표

김균(고려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감사

채이배(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이삼열(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청화(청암사 주지스님)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위원장 : 진영중(성공회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
- 부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
- 당연직 운영위원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한상희(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성진(집행위 부위원장) 박경신(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김영근(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이영동(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박현화(회원모임 '참종다' 대표)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함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구봄(대학생) 김대현(자영업) 김민혜(자원활동가)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세경(서양화가) 김영규(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김진(온라인게임업 종사) 김태엽(자영업)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규(자영업) 박상철(자영업) 박열음(자영업)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박희경(자원활동가) 석락희(직장인) 신영(디자인 회사 운영) 안기석(동시통역사) 양제섭(직장인) 오종철(직장인) 윤형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현정(대학생) 이해숙(수필가) 임상웅(자영업) 장슬기(대학생)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교무) 조규훈(직장인) 조룡상(직장인) 조민지(단체종사자)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채명목(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피학용(자영업)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용환(직장인)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 추천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곽현희(어린이집 교사) 김기용(전문직) 김명수(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성제(공무원) 김요한(직장인) 김은아(교사) 김인식(직장인) 김준호(직장인) 남경완(어린이북 출판작가) 류종길(직장인) 마석우(변호사) 문애솔(직장인) 박성준(직장인) 박찬주(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창근(관동대 교수) 심난숙(직장인) 엄지원(기자) 오지영(대안학교 교사) 오형진(대학원생) 윤지혜(공무원) 이강원(직장인) 이민경(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용구(변호사) 이정현(직장인) 이종춘(경북과학대학 교수) 이해정(중앙대 교수) 임진희(직장인) 정대철(목포포럼 사무차장) 정문영(회계사) 조미숙(서양화가) 조재식(자영업) 조재현(한국은행 직원) 조정숙(직장인) 지정국(직장인) 최중훈(직장인) 한보리(인도주의적 활동가) 한형갑(아파트관리소장) 홍부호(직장인) 황세욱(직장인)

집행위원회

○ 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김성진(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출직 집행위원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신진욱(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형수(민생희망본부 서민희망사업단장, 변호사)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당연직 집행위원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한상희(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박현화(회원모임협의회 대표)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신광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상훈(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현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주은경(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장) 홍윤기(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임종대(전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사무처

○ 사무처장 : 이태호

○ 협동사무처장 :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이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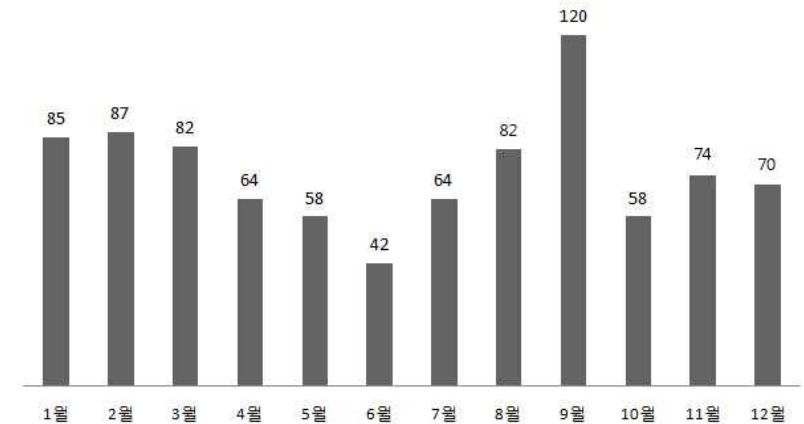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참여연대 2013

회원현황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시민교육
감시와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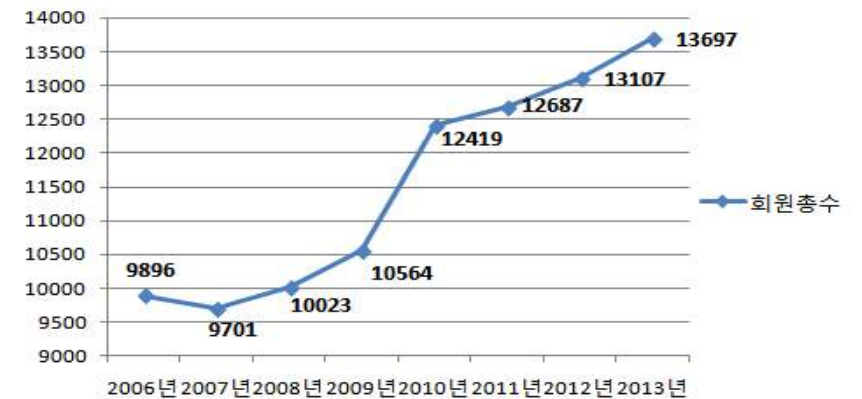
회원 현황

- 2013년 12월말 기준 회원 수 : 13,697명
- 2013년 중 가입 회원 수 : 8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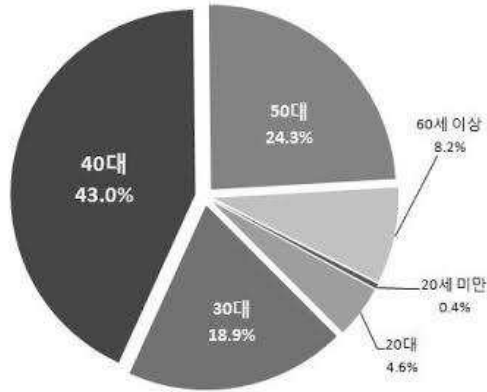
□ 2013년 월별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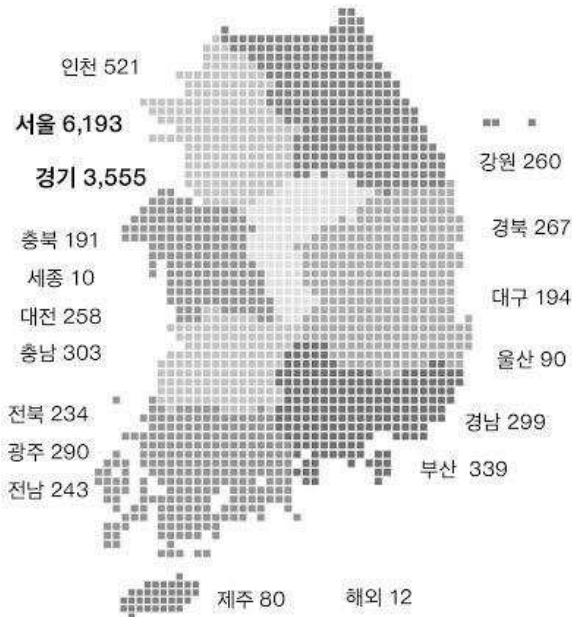
□ 연도별 회원 수 추이



□ 연령·지역별 회원분포 (2013년 말 기준)



회원가입 정보를
기준으로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
13,501명만을
대상으로 함



회원정보 중 우편물
수령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실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 회원 행사

총회	1회	2월 제19차 정기총회
신입회원한마당	6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봄나들이	1회	4월 열려라 국회! 국회에서 놀자 봄나들이
가을여행	1회	10월 안동역사문화기행
지역회원한마당	4회	3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회원자녀 초청 행사	1회	7월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송년회	1회	12월 회원송년회



2013년 9월 신입회원한마당(2013.09.26)



경북 안동으로 떠난 회원 가을여행(2013.10.26-27)

□ 자원활동

2013년 자원활동가 총 89 명

□ 청년 인턴 프로그램

청년연수프로그램

2013. 7. 1. ~ 8. 8. 총 96시간
16명 수료

12기 인턴

2013. 9. 2. ~ 11. 28. 총 370시간
9명 수료

13기 인턴

2014. 1. 6. ~ 2. 20. 총 108시간
30명 수료

□ 참여연대 방문 프로그램

초등/중학생 5회

고등학생 13회

대학(원)생 11회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일반 8회

해외단체 등 16회

- 2013년 중 방문자 총 914명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2013.05.29)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인턴들 (2013.11.11)



2013 회원자녀초청행사 (2013.07.27)

□ 전시회 (20회)

- | | |
|-------------|-------------------------------------|
| 1/4~1/10 | 자신에게 사진을 전네다 (아카데미 임종진 사진수업 5기 전시회) |
| 2/12-2/22 | 강정마을 사진전, 아! 강정 |
| 3/5-3/15 | 아카데미 그림자 정기전시회_기쁨 |
| 5/2-5/31 | 회원 아토피 전시회 |
| 6/8-6/14 | 아카데미 드로잉 5기 수강생 작품전 |
| 6/15-6/28 | 아카데미 창작일러스트 2기 수강생 작품전 |
| 6/30-7/14 | 참여사회 200회 기념전시회 |
| 7/15-7/24 | 밀양송전탑 사진전 |
| 7/25-7/31 | 임종진 사진전 수강생 전시회 |
| 8/1-8/10 | 미술치료사 그룹전 |
| 8/11-8/20 | 장영아 옷 전시회 |
| 8/26-9/14 | 밀양송전탑 사진전 |
| 10/19-10/29 | 이동하 도자기전시회 |
| 10/31-11/9 | 임정화 개인전 |
| 11/11-11/20 | 고경일 컬렉션전_나나이모의 기억 |
| 11/21-11/28 | 강인경,김혜진_공예,일러스트전 |
| 11/29-12/5 | 밀양 기금마련 만화전 |
| 12/6-12/13 | 아카데미 서울드로잉 6기 수강생 작품전 |
| 12/14-12/20 | 창작일러스트 3기 수강생 작품전 |
| 12/21-12/31 | 정진호 개인전 |



2013 그림자 정기 전시회-기쁨(2013.03)

□ 연주회 (1회)

- 11/16 고음악기타양상블 연주회 :
바흐와 동시대의 작가들Ⅲ



고음악 기타 양상블 <바흐와 동시대 작가들 Ⅲ> 연주회 (2013. 11. 16)

□ 저자와의 만남 (1회)

3/19 『젊은 변호사의 고백』 저자 김남희

□ 역사 답사 (4회)

04/13 북촌의 근대역사문화를 찾아서

05/11 한양도성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10/12 청계천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11/16 북촌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북촌역사탐방(2013.04.13)

□ 영화상영 (8회)

03/13 <월마트와 한판승부> 초대 손님_양창영 변호사

04/10 <두개의 선>

05/15 <위 캔 두 댓> 초대손님_조우식(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06/12 <후쿠시마의 미래> 초대손님_타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의 일
본활동가)

07/10 <위아낫브로크(we're not broke)> 초대손님_박원석(진보정의당의원)

09/11 <만화로 보는 빈곤의 역사>

10/16 <기브 어스 더 머니>

11/13 <라페아 솔라마마>



여성마라톤대회 참가(2013. 05. 12)

□ 기타

04/06 2030카테일파티

05/12 여성마라톤대회

05/25 아토피 디자인전 작가와의 대화

10/03 국제평화마라톤대회

11/29 탈핵 강연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장)

11/30-12/01 밀양희망버스 (시민행동기획단)

시민교육

아카데미 느티나무 총 51개 강좌 개설, 수강생 989 명

□ 강좌목록

시기	구분	강좌명	강의 횟수	참여 인원
겨울	민주주의	세미나:생활정치,나도할수있다고!	7	14
	민주주의	평화교육 워크숍: 누구나 맘대로 톡톡 2기	5	20
	민주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힐링' 을 넘어 '성찰' 로	12	18
	인문	오강남의 독서 특강 : 시대와 삶, 길을 찾는 그대에게	3	30
	청소년	1518 청소년 워크숍: 나를 만지다	4	14
	생활문화	LIGHHT워크숍:심화반	8	10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3기	5	13
	인문	[참소]원작을 보셨나요 '레미제라블' 과의 동행	1	9
봄	민주주의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5	16
	민주주의	'나' 의 시민정치학교 I - 다시 정치를 향하여	10	25
	민주주의	톡톡!평화공부 : 탈안보 반군사	6	13
	인문	세계 종교의 이해 I : 서양종교	8	34
	인문	다시 보는 프랑스 혁명사	6	32
	인문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12	27
	생활문화	서울 드로잉 5기	12	20
	생활문화	배민정 창작일러스트2기	12	19
	생활문화	LIGHT워크숍: 내 안의 의사 만나기	10	10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4기	5	13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5기	5	9
	생활문화	Body Talk워크숍: 솔직한 몸 이야기	8	5
	생활문화	임종진 사진수업 6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12	12
	굿모닝세미나	꿈 투자 워크숍: 꿈거울로 참나를 만나다	10	19
	굿모닝세미나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신들의 이야기	9	17
	굿모닝세미나	나를 찾아가는 스타일링 워크숍 4기	6	5
	특강	[참소] 거문도를 점령하라 - PH익스프레스	1	11
	특강	LIGHT 워크숍 안내특강: 습관을 바꿔야 세포가 바뀐다	1	12
여름	특강	[5.18특강] 상처 입은 치유자, 5월의 사람들	1	37
	민주주의	정의의 계보학 : 정의는 정의로운가?	6	26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5기	5	12

가을	인문	박노자 특강 : 뒤집어 보는 종교 전쟁 평화	2	40
	청소년	1518 청소년워크숍 : 나를 만지다 시즌2	3	10
	특강	[참소]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저자 김동춘과의 만남	1	22
	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6	32
	민주주의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2	26
	민주주의	느티나무 고전세미나 - 한나 아렌트와 철학하기 첫번째 <과거와 미래사이>	6	10
	민주주의	'나'의 시민정치학교 II -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생활정치	7	17
	민주주의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 근대편	7	50
	인문	문학으로 보는 중국현대사	5	22
	인문	세계 종교의 이해 II - 동양편	8	31
	인문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II	9	26
	인문	답사특강: 강화도, 한국 근대의 시작	1	28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6기	6	13
	생활문화	배민정의 창작일러스트 3기	12	14
	생활문화	서울드로잉 6기	12	16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6기	6	11
	굿모닝세미나	나를 찾아가는 스타일링 워크숍 5기	6	7
	굿모닝세미나	삶의 길목에서 만난 동화 - 자아탐색을 위한 고전동화 다시보기	8	19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나를 만나다	10	19
	굿모닝세미나	Body Talk 워크숍 - 솔직한 몸 이야기	8	10
가을	특강	표창원 특강 : 대한민국 정의에 돌직구를 던지다	1	55
	특강	LIGHT 워크숍 안내특강 - 습관을 바꿔야 세포가 바뀐다	1	9
합계			322	989



2013 평화교육워크숍-
누구나 맘대로 톡톡 2기
(2013 겨울)

감시와 정책제안

□ 활동 통계

구분	내용	활동량*
정책보고서 등	이슈리포트	6
	보고서	16
	의견서/입법건의서 등	55
	분석/해설 자료	36
	자료집/단행본	6
	공개 질의/서한	25
	계	144
토론회	토론회/좌담회/포럼/심포지엄/워크숍 등	84
입법청원/입법발의	입법청원	11
	의견청원	6
	입법발의(의원 공동발의)	3
	계	20
소송제기	고소/고발	14
	행정소송	5
	민사소송	4
	헌법소원	3
	계	26
행정처분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등	7
	공정위 신고	1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조사요청	4
	민원/진정	3
	계	27
성명/논평	성명/논평	393
직접행동	집회/시위/촛불문화제 등	35
	1인시위	25
	캠페인·서명운동	21
	항의기자회견	196
	면담·방문	1
기자회견	계	278
	입장발표, 기구발족, 실태 보고 기자회견	69
기획행사	의인상 시상식/평화박람회/영화제 등	8
미디어기획	언론공동기획	32
	인포그래픽	5
	여론조사	2
	칼럼·기고	103
	계	150

*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이슈리포트

04/09	SDMA Issue BriefV - April 2013
05/02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11/21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
12/06	2013 KoFID Issue Brief 원조투명성 왜 중요한가?
12/01	합리적 대안도,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12/24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정책보고서/자료집

01/20	이동흡 현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보고서
01/30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내는 민생복지민주주의평화를 위한 우선과제 보고서
04/05	박한철 현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보고서
0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05/27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06/16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07/23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09/10	참여연대 2012-2013 활동보고서
09/30	2013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13개 분야 95과제 정책자료집
10/09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2 : 기초자치단체
10/16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
10/23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3
11/01	2013 평화군축박람회 자료집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11/05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11/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2/11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공공기관
12/21	2013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자료집

□ 입법·의견청원/입법발의

03/07	제주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국회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의견청원
03/07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07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07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07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14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03/14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 입법청원
04/09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청원
05/15	대리점 보호 및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
06/12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06/19	집단소송제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청원
06/20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책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07/17	신한금융지주 라온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08/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08/16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08/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청원
11/05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11/14	국회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청원
12/03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발의
12/12	지방정당 설립 허용,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 소송/고발

01/24	론스타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고발사건 항고
02/0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02/27	KT 이석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03/05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03/11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담배광고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03/21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
04/04	진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04/16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비공개 이동통신3사 손해소송 제기
05/06	서울고검의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등 고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05/06	김승유 전 하나금융 대표 등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한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05/28	111인 시민고발인단,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05/29	CU홍석조 회장과 최고책임자 편의점주 사망에 대한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
05/30	원세훈 전국정원장등 반값등록금관련문건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 고발
06/10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전국정원장 상대 '중복세력 규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06/20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15명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06/27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07/25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08/07	법무부 장관 상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09/16	미니스톱 상대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
09/25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09/29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10/10	이석재 KT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2차 고발
10/15	강남구청 냉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11/27	방통심의위의 RTV <백년전쟁> 중징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12/04	한국사 6종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 행정처분/감사청구/공정위 신고 등

01/10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02/19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 공익 감사청구
03/18	교과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 감사청구
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04/10	용산 개발무산 사태 관련,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의 행정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
04/16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비공개 이동통신3사 과학부에 진정
04/23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전회장 비호 의혹 금융위·금감원 등 감사청구
06/03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06/13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시 전화투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06/20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해태그룹을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신고
06/24	평창/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07/03	미 정보기관의 주미한국대사관 도청관련사실 확인 요청서 미대사관 발송
07/10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공동조정신청
07/15	화장품업체(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07/28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08/05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
08/20	KT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08/29	엘지유플러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10/01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순당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10/13	동양그룹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청구
10/23	공정위에 YBM 한국토익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약관심사청구
10/31	공정위에 토익학원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신고
11/19	공정거래위원회에 멕시코의 불공정행위 신고
11/20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세븐 신고
11/21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 금감원에 추가신고
11/21	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단행본/정기간행물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 남찬섭 엮음 | 나눔의집 | 15,000원 | 2013-01-15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 15,000원 | 2013-02-04

2030 크로스 - 불임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불임의 세대론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양정무 · 윤홍식 · 이상호 · 이양수 엮음 | 이매진 | 13,000원 | 2013-02-28

스웨덴 스타일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엮음 | 강내영, 온나자와 나오코, 홍일표 옮김 | 이매진 | 17,000원 | 2013-04-01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윤홍식 지음 | 이매진 | 15,000원 | 2013-12-19

참여사회 1월~12월호 | 참여연대 | the DNC

복지동향 1월~12월호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나눔의 집

시민과 세계 제22~23호 |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 2013-01-31, 2013-07-10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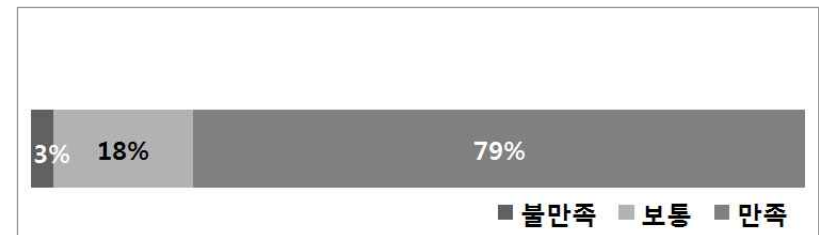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2013년을 평가하다

참여연대는 2014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약 10일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3년 활동 평가, 2014년 사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모니터단 478명 중 199명(응답률 약 42%)이 참여했습니다.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3회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2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4년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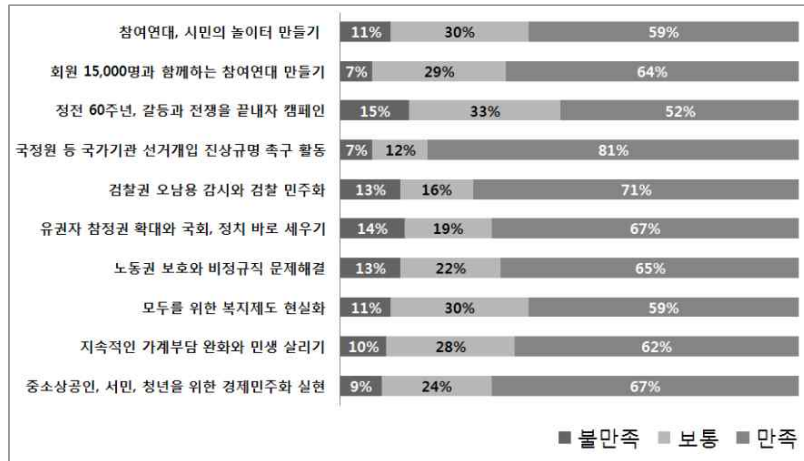
■ 2013년 활동 평가

Q1. 2013년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원모니터단은 2013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79%)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사회 현안들의 주요 쟁점을 적절하게 공론화하지 못했음',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음', '부정선거에 대한 실망스런 발언 때문에' 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Q2. 2013년 10대 중점과제, 얼마나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Q3. 2013년에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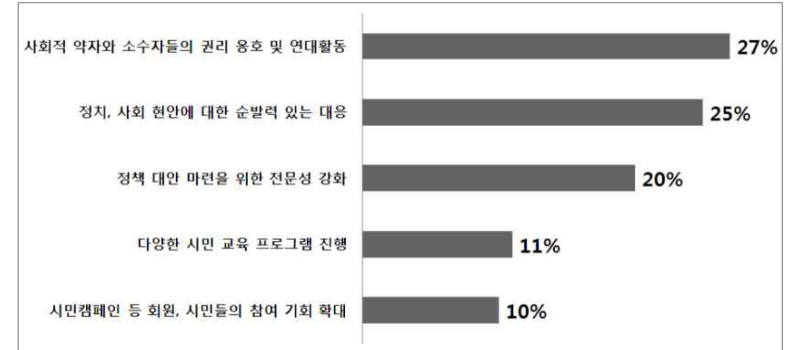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은 2013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및 민주주의 행진**’(24%)을 꼽았으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석채 KT 전 회장 등 부패정치인, 기업인 고발’(18%), ‘남양유업 등 대형유통업체-가맹점주 집단교섭 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14%),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발행’(7%), ‘UN 등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 및 민주주의 실태 보고’(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Q4. 2013년에 진행한 대표적인 회원/시민 사업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3년 대표적인 회원/시민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추구를 위한 거리행진 등 시민 직접행동 진행**’(29%)이 꼽혔고, 이어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22%),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등 시민 참여 캠페인 진행’(13%), ‘인턴, 청년 아카데미 등 대학생 프로그램 진행’(1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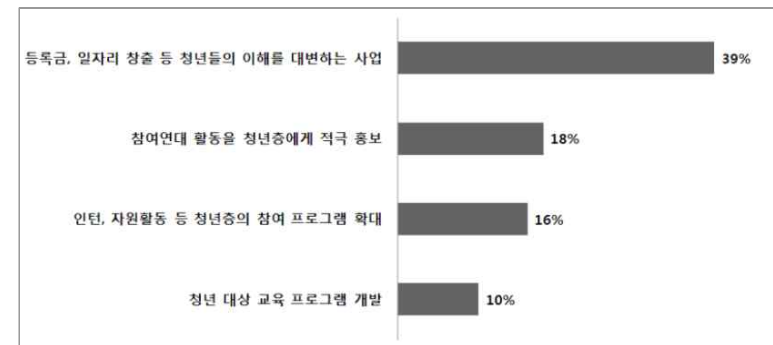
■ 2014년 사업 방향

Q5. 2014년 가장 강화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원모니터단은 2014년 강화해야 할 사업방향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 옹호 및 연대활동**’(27%)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25%),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20%),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11%), ‘시민 캠페인 등 회원, 시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1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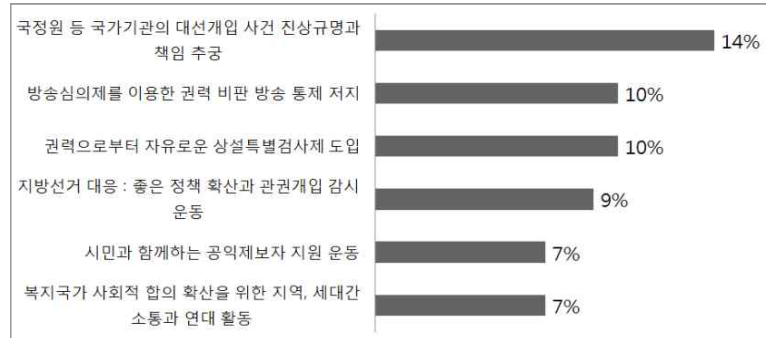
Q6. 참여연대가 20대의 신뢰와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회원모니터단은 20대의 신뢰와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39%)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참

여연대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18%), '인턴, 자원 활동 등 청년층의 참여 프로그램 확대'(16%),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1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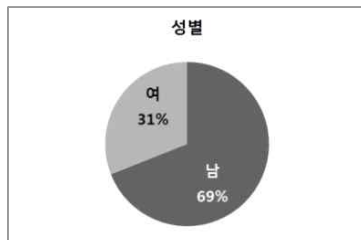
Q7. 2014년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20개 과제 중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회원모니터단은 선정된 2014년 20대 중점과제 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14%)'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 비판 방송 통제 저지'(10%),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감사제 도입'(10%), '지방선거 대응 :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 운동'(9%),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7%),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 세대간 소통과 연대 활동'(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고는 일부 응답을 단순 요약한 것으로, 이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분석보고서가 나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참여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보고 할 예정입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참여연대 노래

참여연대가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여 기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꿈 꾸 며 사 는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아
름
정 의
희 망

답 고 사 람들 게 사 는 세 상 - 함께 꿈 꾸 는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혼 자
름 고 맑 고 깨끗 해 진 세 상 - 시 민
속 예 서 로 의 지 하 는 세 상 - 물 받

꾸 는 꿈 은 단 지 꿈 이지 만 - 다 함 께 꾸 는 꿈 은 현 실 이 된 - 다 - 참 여
울 의 목 소리 로 참여 연 대 - 시 민 의 권 익은 우리 가 지 키 - 자 -
을 이 모 여 시 냈 물 이 되 어 - 흐 르 고 마 침 내 큰 강 물 이 룬 - 다 -

하 자 연 - 대 하 - 자 - 그 꿈 우 리 함 께 이 루 기 위 - 해 - 참 여

하 자 연 - 대 하 - 자 - 아 름 답 고 밝 은 세 상 이 루 - 기 - 위

- 해 -